

# 통일과 답변

2022년 하반기호  
제집 2호



국립통일교육원



# 통일과 담론

2022년 하반기호(제1집 2호)



국립통일교육원

# 통일과 담론

2022년 하반기호(제1집 2호)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립통일교육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편집위원장	차문석
외부편집위원 (가나다순)	강구섭(전남대학교) 박소진(신한대학교) 송기찬(리츠메이칸대학교) 윤성욱(충북대학교) 이동기(강원대학교) 정병기(영남대학교) Cheehyung Harrison Kim(김지형)(하와이대학교)
편집위원 (가나다순)	권속도 김지영 김진환 민경태 박계리 엄현숙 정은찬 정진헌
편집간사	김지연 지현성

---

발행인 이인배  
편집인 차문석  
발행처 국립통일교육원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주소 (0101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국립통일교육원  
전화 02-901-7114, 02-901-7167  
Fax 02-901-7088  
Email unicenter@unikorea.go.kr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 목차

---

2022년 하반기호를 내며 · 편집위원회	4
------------------------	---

---

## 특집기획

세계질서 전환의 시대와 한국 · 전재성	13
대전환의 시대, 남북관계의 회고와 성찰 · 박인휘	37

---

## 일반논문

남북 문학사의 소통과 ‘통일/문학’이란 개념 - 북한 『조선문학』, 『문학신문』(1945~67)의 기사 제목 분석을 중심으로 · 김성수	61
---	----

---

## 글로벌 인사이트

최근 미국 고위급 인사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의 안보 정세와 양안 평화와 안정의 전망 · 왕신셴(王信賢)	89
--	----

---

## 이슈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솔직한 마음 · 박주화	109
----------------------------	-----

---

## 리뷰

‘고뇌하는’ 현실주의자와 ‘제3의 성찰’ · 정병기	123
------------------------------	-----

---

## 2022년 하반기호를 내며

이번 호부터 저널은 『통일과 담론』이라는 제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저널을 창간할 때, ‘통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담론들’이 이 저널을 통해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담론들’이 이 저널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연결되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상정했습니다. 저널을 창간하면서 품었던 그러한 의지와 역할이 좀 더 잘 드러나도록 제호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2022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기에 남북관계는 여전히 시계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에도 쉽 없이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사적 행동을 더욱 강화해 왔고 이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도 더욱 고조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핏만 보아도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는 나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향은 우리들의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나아진다는 것은 어쩌면 좋았던 과거의 것들이 현재에는 더 좋아지고 그리고 미래에는 현재보다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들이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한반도와 남북관계에서는 그러한 나아짐의 현상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번 호는 한반도에서 ‘좋았던’ 두 개의 기억을 상기하면서 기획하였습니다. 제호를 바꾼 『통일과 담론』은 올해 2022년이 데탕트 시대였던 1972년에 잉태된 ‘7.4 남북공동성명’의 50주년임을, 그리고 탈냉전 시대였던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30주년임을 기억해 내는 것에서 기획을 시작

---

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시기는 우리에게 ‘전환의 시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대는 세계적 수준의 데탕트가 시작되었고 그 에너지가 한반도로 연결되어 남북한이 처음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전환을 알렸던 ‘7.4 남북공동성명’은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는 냉전 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탈냉전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발효하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사람 간에든 국가 간에든 과거에 함께했던 기억들은 서로의 미래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제약한다고 봅니다. 『통일과 담론』은 이번 기획을 통해서 지난 30년과 50년 전의 기억과 경험을 박재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새로운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는 한반도에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는 토대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신냉전 체제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구냉전과 데탕트, 그리고 탈냉전에 이어서 세계가 신냉전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억하기로 했던 1970년대와 1990년대는 냉전으로부터 ‘나오는’ 전환의 시대였지만, 현재 회자되고 있는 2020년대의 전환은 냉전으로 다시 ‘들어가는’ 전환의 시대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와 전환의 세계에 직면하여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 [특집기획]으로 두 개의 글을 실었습니다.

---

서울대학교의 전재성 교수는 「세계질서 전환의 시대와 한국」이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전재성 교수는 1970년대 데탕트의 경과, 1990년대 냉전 종식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2022년 현재의 세계 변화를 탈냉전 30년 동안 배태된 거시복합이행의 국제질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질서는 미중 관계의 규정 뿐 아니라 세계질서의 여타의 구조적 변수들과 상호 연동되어 전개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 한국이 맞이하게 될 세계와 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전략과 지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박인휘 교수는 「대전환의 시대, 남북관계의 회고와 성찰」이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1970년대의 데탕트와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관계에서 다양한 교류의 실시, 직통 전화 개설, 적십자회담 등 지금까지의 남북한 관계에서 나침반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탈냉전기의 '남북기본합의서'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고조시킨 것으로 회고됩니다. 하지만 이후 30년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핵문제에 장악 당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맞이하는 전환의 시대에서 남북관계가 가야할 방향성과 관련하여 우선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논의가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북정책과 국내정치 간에 건강한 균형감이 있어야 함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일반논문] 코너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자들이 쓴 학술적인 글을 소개하여 보다 넓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소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수



---

편의 논문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번 호에는 한 편의 논문을 신게 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김성수 교수의 논문 「남북 문학사의 소통과 ‘통일/문학’이란 개념」은 독특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방 이후 분단 70년 동안 남북한 학자들과 비평가들이 분단된 자기 문학사(론)를 정전화하면서 상대를 타자화하고 공동화시켰음을 비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김성수 교수는 이제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사’를 서술하는 포용적 시각으로 한반도 통합 문학사를 서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결론의 ‘빨썬의 문학사에서 덧썬의 문학사로’라는 문구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의 대표적인 이슈로 부상한 것은 다름 아닌 ‘대만 문제’입니다. 미중 양국이 2022년 7월 정상회담에서 ‘불에 타죽는다’ 등의 감정 섞인 말들이 교환되었던 것도 바로 대만 문제를 둘러싼 것이었고, 이후 미 하원 의장 등 고위급 미국 정치인들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대만 문제는 국제적으로 더욱 이슈화 되었습니다. 대만 문제와 한반도의 연관성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동시에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호 『통일과 담론』에서는 대만 문제가 실제로 대만 현지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대만 국립정치대의 왕신셴(王信賢) 석좌교수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왕신셴 교수는 「최근 미국 고위급 인사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의 안보 정세와 양안 평화와 안정의 전망」이라는 제법 긴 제목의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최근의

---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우려와 반응, 그리고 그것이 對대만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 정세와 양안 간의 결정적인 변수가 미중 관계라는 점, 그리고 대만 문제가 한국에 미치는 정치적(군사안보적) 영향과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왕신센 교수는 이러한 것들이 대만의 미래 운명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태 지역 전체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역내 국가들이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박주화 박사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이슈] 코너를 채워 주셨습니다. 박주화 박사는 우리 사회에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뒤 통계적 방법으로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박주화 박사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약 50%,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국가로 살아야 한다는 응답이 18%에 불과하다는 충격적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전자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회적 규범이 강하게 작동하는 반면 후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통일 인식에 녹아 들어있는 사회적 규범의 거품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리뷰] 코너에서 영남대학교 정병기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책 두 권을 리뷰하였습니다. 한 권은 권영세 현 통일부 장관이 번역한 『서독 기민/기사당의 동방정책: 고뇌하는 현실주의자』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은 류우익 전 통일부 장

---

관이 쓴 『제3의 성찰: 자유와 통일』이라는 책입니다. ‘책들을 서평한 글’을 다시 소개하는 것은 중복되는 작업이기도 하거니와 리뷰의 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어 독자들이 직접 두 권의 책에 대한 정병기 교수의 리뷰를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정병기 교수는 대동 정신, 실용적 접근, 일관성, 그리고 ‘이어달리기’의 개념들을 통해서 두 권의 책을 리뷰하였습니다. 리뷰를 통해서 사실상 새로운 성찰들이 생산되고 있는 셈입니다.

제호를 바꾼 『통일과 담론』은 2023년에도 한반도의 통일, 사회의 통합, 남북한 관계, 한반도 평화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과 의견들이 소통되도록 소개하고 연결하여 공존시키는 플랫폼의 역할을 더욱 왕성하게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통일교육연구센터장 차 문 석



# 특집기획

---

세계질서 전환의 시대와 한국 • 전재성

대전환의 시대, 남북관계의 회고와 성찰 • 박인휘





---

# 세계질서 전환의 시대와 한국

●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I. 서론

한국은 건국 이후 분단된 약소국에서 신흥선진국으로 부상했다. 반세기 남짓한 시간 동안 한국의 부상은 급속할 뿐 아니라 발전과 안정의 공고화 과정을 다져왔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발전과 정치사회 민주화, 문화 발전을 이루었고 현재는 지구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국내발전과 세계질서의 상호작용에 의해 규정되어 왔는데 특히 한국을 둘러싼 지역질서, 세계질서는 실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한국을 둘러싼 세계질서 변화의 특징 중의 하나는 질서의 변화가 점차 거시적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1970년대 데탕트의 전개는 미소 냉전 체제 속 강대국들 간 세력균형의 변화 및 냉전 수행 전략의 변화가 주된 내용이었다면, 1990년대 전후 냉전의 종식을 둘러싼 세계질

서의 변화는 미소 간 강대국 균형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냉전질서가 미국 주도 질서로 변화된 세계질서의 내용의 변화였다. 2022년 한국이 겪고 있는 세계질서의 변화는 거시 복합이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한 단극패권체제가 중국의 부상으로 세력균형의 변화를 표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탈냉전 30년 동안 전개된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국가들의 주권이 약화되어 비국가 행위자들, 국제기구의 힘이 강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를 시작으로 심화되는 보건, 환경 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서 핵전쟁의 공포가 보여주듯이 인류 공멸의 위기도 함께 겪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는 한국의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외교정책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안겨준다. 이 글에서는 미소 냉전기 데탕트, 냉전의 종식, 그리고 현재 세계질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지금에 주는 함의를 추적해본다.

## II. 데탕트와 세계질서의 변화

### 1. 데탕트 전개와 국제정세의 변화

한국은 1948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냉전의 시기를 살았고 자유진영에 속하면서 미국 패권의 영향 하에서 발전해왔다.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은 전후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적 대립과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 중심의 양극적 세력배분구조의 기반 위에서 세계를 두 진영으로 갈랐다. 냉전은 두 초강대국 간에 세력균형의 변화, 두 국가를 축으로 한 진영의 변화 및 결속력의 추이, 미소 초강대국 이외에 성장한 여타 선진국들의 향방, 그리고 진영 소속을 거부하는 여러 3세계 국가들의 입장



에 따라 여러 국면을 거쳐왔다.

냉전의 변화 속에서 커다란 변화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 즉 데탕트의 성립과 함께 발생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직후 본격적 냉전이 성립하기까지 수년이 경과하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냉전이 열전 양상의 대리전을 띠면서 구조적으로 냉전체제가 자리잡게 되었다. 1950년대를 통하여 미소 냉전 체제는 상호배타적인 양대 진영체제로 고착되고 대결과 경쟁의 양상은 두드러졌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에 점차 이완과 변화의 양상을 보이다가 급기야 1970년대 초 데탕트를 맞이한 것이다.<sup>1</sup>

1953년 스탈린의 사망, 이후 곧 이어진 중소 분쟁은 공산진영 결속의 완화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중국은 소련과 연대를 유지하지만 1964년 독자적인 핵실험의 성공에 이어 베트남 전에서 북베트남 지원, 그리고 1971년 국제연합에서 중국이 중화민국을 승계하여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정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동구권에서는 1953년 동독의 공산정부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이 대규모 소요사태를 벌여 서독으로 대규모 탈주가 이루어졌고 결국 소련은 탱크를 앞세워 동독에 진주하게 되었다. 이후 1956년에는 헝가리에서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고, 1968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운동인 소위 프라하의 봄 사태가 발생하였다.

진영 결속력 약화는 자유진영에서도 나타나서 1956년 수에즈 운하 사건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간 상이한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표출된 사건이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터키와 이탈리아에 배치된 주피터 미사일 철수를 소련과 합의한 것도 유럽 국가들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킨 계기가 되었다. 미소 간 핵무기 경쟁이 치열하던 시기에 소련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게 되었고 미국은

<sup>1</sup>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대량보복전략을 유연반응전략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의 미 본토 공격 능력이 확보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을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안보분리를 우려한 국가들, 특히 프랑스는 독자핵개발을 서둘러 결국 드골대통령 시기 1960년에 프랑스는 핵국가가 되었다. 프랑스는 이후에도 나토의 통합사령부로부터 탈퇴하는 결정을 내려 나토와 정치적 관계만을 유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데탕트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출현한 사건으로 변화하는 냉전의 단계에서 진영 간 배타적 대립 관계가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 계산속에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이 특수이해관계에 기대어 대서양주의를 강화하고 소련과 공산권 봉쇄에 주력하는 것에 반발하여 소련 및 동구권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자 했다. 서독의 브란트 수상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독에 대한 전면적 관여와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동방정책을 추진하였다.<sup>2</sup>

유럽의 데탕트에 대해 미국은 경계하는 입장이었지만 1968년 대선에서 승리한 닉슨대통령은 본격적인 외교정책의 변화를 추구했다. 닉슨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키신저는 소위 평화의 구조(structure of peace) 전략을 추진했다. 미국은 1960년대를 통해 더 이상 자유진영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경제력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점, 이제 세계는 미소 두 초강대국 뿐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여 다극체제를 상정한 질서가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공산권의 팽창위협이 더 이상 압도적이지 않다는 점, 냉전적 대립 이외에 핵 비확산, 국제금융체제,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중요해졌다는 점도 중시하게 되었다. 결국 미국은 데탕트 정책을 통해 소련의 적대적 모험주의를 방지하면서 미국 동맹의 힘을 유지하고, 서유

---

<sup>2</sup> Raymond, L Garthoff, *Detente and Confrontation: American-Soviet Relations from Nixon to Reagan*(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4)

럽 동맹국들, 일본,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힘으로 안보를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소련에 대한 견제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중국과 관계를 추진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베트남 전쟁을 마감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개입을 줄이면서 미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결국 데탕트 전략은 변화하는 강대국들 간 세력균형 변화를 유념하면서 다극적 세계에서 세력균형과 전략적 협조를 강조하고 미국 지도력을 유지하고 한 것이다.<sup>3</sup>

## 2. 데탕트가 한국에 준 영향

미국의 데탕트 전략에서 한국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미중 관계 개선 및 국교 정상화의 과정이다. 미국은 1969년 7월 25일 소위 팜 독트린을 발표하여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책임지게 한다는 전략적 방향을 발표하였고 점차 베트남전을 마무리하여 새로운 아시아 전략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핵 확장 억제와 방어공약은 지키지만 미국의 안보 개입의 정도를 약화시킨 것이다. 미중 화해 정책을 통해서도 미국인의 중국 여행제한을 철폐하고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중소 분쟁을 이용하여 미중 관계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키신저 보좌관은 1971년 중국을 방문하여 미중 관계 정상화의 기반을 닦았고 결국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상하이 커뮤니케'를 발표하여 양국의 협상 내용을 발표하였다. 미중 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협력하며 인도차이나나 한반도에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미중 양국은 소련과 협력하지 않고 소련의 패권 수립 노력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위협을 느낀 소련은 결국 미국과 1972년 5월 미소 정상회담을 개

3 전재성, 「1960년대와 1970년대 세계적 데탕트의 내부 구조」 『국제정치논총』 제45집3호 (2005), 33~56쪽.

최하여 관계개선 및 1차 전략핵무기제한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미소 양국은 핵전쟁을 막고 긴장완화를 추진하며 군비감축과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게 된다.

데탕트는 미소 양국간 세력균형의 변화, 냉전기 진영 내 국가들 간의 결속력 변화, 그리고 진영을 넘어서는 국가들 간의 새로운 전략적 관계 설정이라는 큰 변화를 상징하는 흐름이었지만 냉전이라는 기본 질서를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미국과 자유진영의 입장에서는 대소 봉쇄라는 기나긴 흐름의 국면적 변화였으며 각 국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적 외교정책을 추구하였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중 양국은 화해국면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었는데 키신저는 주은래와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철수에 관한 미국의 긍정적 견해를 언급했고 주은래는 북한과의 소통 속에 한국과 미국의 북한 안보 위협에 대한 견해를 전달했다. 1971년 미국은 제7사단을 철수시켰고 추가철군에 대한 전망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추가철군을 막고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압박을 느끼면서 데탕트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데탕트 국면을 활용하여 한국에 대한 평화공세를 가속화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이 원하는 통일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남북 간 상반된 입장에서 비롯된 잠정적 미니 데탕트는 오래갈 수 없었고 결국 북한은 평화공세를 통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1973년 8월에 일방적으로 남북 대화 중단을 선언하여 한반도에서의 데탕트는 막을 내린다.<sup>4</sup>

데탕트가 주는 교훈은 강대국 정치의 변화가 한국과 같은 상대적 약소국의 외교대안의 폭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중 관계 정상화는 물론 닌

4 이상윤, 「데탕트의 위협과 기회 -1970년대 초 박정희와 김대중의 안보인식과 논리」 『세계정치』 14호 (2011), 101~135쪽.

슨 정부의 급속한 아시아 후퇴전략, 주한미군 철수 등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려웠다. 물론 1960년대를 통해 미국 패권의 점진적 약화는 한일 수교, 한국의 베트남 파병과 같은 미국 동맹국들 간의 관계 강화로 이어졌다. 미국은 혼자 힘으로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 경제 지원을 하기 어려워지자 일본이나 서유럽 국가들에게 자유진영 약소국들에 대한 지원을 독려했다. 미국은 한일 수교를 통해 대한 경제원조의 부담을 덜고자 했고 한국의 베트남 파병도 반겼다. 그러나 1970년대의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박정희 정부에게 많은 도전을 안겨주었다.<sup>5</sup>

또다른 교훈은 한미동맹의 구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탕트 시기만 해도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지 않아 미국과의 긴밀한 협상 속에 한국의 군사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 한국은 주한미군 일부 철수에 대한 대가로 한국군 현대화를 약속받는 한편,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미중 간 합의와 궤를 같이하는 한반도의 미니 데탕트를 추구하면서도 북한의 대남 공세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역량을 결집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다. 결국 데탕트는 강대국 지정학의 급속한 변화라는 변수를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기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의 과제를 숙고하게 만드는 계기이다.

---

5 전재성,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미국의 대한(對韓)외교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집 2호 (2004), 63-89쪽.

### Ⅲ. 냉전의 종식과 세계질서의 변화

#### 1. 냉전의 종식 과정과 다양한 원인 논쟁

냉전의 기원에 관한 논쟁만큼이나 냉전의 종식에 대한 논쟁도 진행 중이다. 냉전의 기원에 대한 정통주의, 수정주의, 후기수정주의 등 책임론과 기원론에 대한 논쟁이 있듯이 냉전의 종식은 과연 미국의 강력한 대소 전략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사정에서 기인한 바가 컸는지 다양한 논의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1980년대 미국의 1차 문서들이 여전히 미공개된 부분이 많아 향후 수십년이 지나도록 논쟁은 진행될 것이다.<sup>6</sup>

냉전의 종식은 1989년 12월 부시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몰타에서 회담을 열고 선언하면서 공식화되었지만 이미 이전부터 미소 간 냉전 종식의 여러 합의와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었다. 1985년 11월 레이건-고르바초프 제네바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미소 간에는 1987년 12월 중거리핵전력조약(INF)과 1991년 7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 맺어졌고 소련은 동유럽에서 50만에 달하는 전력을 철수함으로써 군축과 함께 냉전 종식이 이루어졌다. 소련은 1988년 5월 10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끝내고 철군하였고 동구권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도 약화되기에 이르렀다.

1981년에 등장한 레이건 대통령이 강력한 대소 전략을 추구하여 소련이 압박에 못이겨 결국 붕괴되었다는 주장이 한편에 존재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소련이 악의 제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은 유명한 악의 제국 연설을 행한 바 있고 공산주의는 소멸해야 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소위 “자유를 향한 십자군정

---

<sup>6</sup> Kenneth W. Thompson, ed. *Foreign policy in the Reagan presidency : nine intimate perspectives*(Lanham, Md.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3).

신(crusade for freedom)”을 주장하였고 공산권에 대한 강력한 공세전략을 추구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데탕트를 비판하면서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peace)를 강조하고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기(Make America Strong Again)을 주장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러한 레이건의 슬로건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 공세 정책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전략방어구상(SDI)으로 소련에 대한 압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소련은 미국의 이러한 구상이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없지 않았겠지만 미사일 방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탄두와 미사일의 양산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레이건 정부는 또한 소련이 지속적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3세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맹을 강화하여 소련의 군사비 지출을 억제하고 모험주의를 막으며 소련의 경제적 약점을 강조하여 소련의 동맹 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을 주된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소련의 경제는 원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1980년대 유가하락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레이건 정부가 중동의 전략적 협력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하여 원유를 증산하여 세계적인 원유가 하락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일부 나온 적도 있다.<sup>7</sup>

미국의 냉전 종식 기여론의 다른 측면은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 협상 의지를 드는 경우도 있다. 1984년에 접어들면서 레이건 대통령은 이전보다 소련에 대해 훨씬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미소 간 충돌이 결국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군비축소를 통한 공존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더욱 그렇게 되었다고 본다. 특히 1985년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고 그해 11월

7 Peter Schweizer 저, 한용섭 역, 『레이건의 소련붕괴전략』 (서울: 오름시스템, 1994[2006]).

6년만에 미소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 외교, 그리고 영국의 대처 수상의 중재 외교 등이 힘을 발휘하여 냉전의 종식을 추동했다는 주장이 한편에 있다.<sup>8</sup>

다른 한편에서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성향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주장이 있다. 농부출신이었던 고르바초프는 54세의 젊은 나이에 소련의 7번째 서기장으로 당선되었고 기존의 고령의 서기장을 대체하여 개혁 성향의 정치와 경제 정책을 추구하였다. 경제개혁을 뜻하는 페레스트로이카와 정치개방을 뜻하는 글라스노스트는 고르바초프 개혁의 두 축이었고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강압과 군사력보다 대화와 협상에 의한 정치와 외교를 추구해나갔다. 이미 위기에 처한 소련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계획경제를 완화하여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개방된 시민사회의 여지를 허용하여 공산당의 일당 독재체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동구권 국가들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강압과 제재를 철회하고 민주화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폴란드가 1990년 자유선거를 통해 동유럽 최초의 합법적인 독립 노조를 설립한 자유연대노조의 바웬사를 대통령을 당선시켰을 때에도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강제적 진압이나 개입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1989년 11월 9일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이를 인정하였고 통일 독일의 나토 잔류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들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개인 변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냉전의 종식이 이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견해이다.

동시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소련은 이미 경제가 심각하게 기울고 있었고 미소 냉전 기간 동안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몰락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소련의 경제는 이미 상당 부분 약화되었지만 원유수출로

---

<sup>8</sup> Beth A. Fischer, *The Reagan Reversal: Foreign Policy and the End of the Cold War*(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97).



경제를 이어가고 있었고 GDP 대비 20%에 달하는 군사비 지출로 경제가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동구권 국가들의 이탈 역시 막기는 어려웠고 발트 3국의 이탈 등 소련의 붕괴도 예상 가능했다는 것이다.

## 2. 냉전의 종식과 한국의 북방정책

미소 양대 진영의 대결에 간혀있던 한국에게 냉전의 종식, 특히 자유진영의 승리는 큰 기회로 다가왔다. 한국은 소위 북방정책을 추진해 남북관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소련, 중국과 수교하여 북방으로 국제적 진출을 추구했다. 북방정책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1983년 전두환 정부로 알려져 있지만 1988년 등장한 노태우 정부가 본격적인 북방정책을 추진했다.<sup>9</sup> 노태우 정부는 77선언으로 공산권과 관계 개선 의사를 표명했고 서울 올림픽을 통해 소련,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sup>10</sup> 1988년 말 남북은 고위급 총리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남북한 쌍방은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예비회담 8번을 개최했고, 2번의 실무대표접촉을 판문점의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한 바 있다. 1991년 남과 북은 UN에 동시가입하였고 한반도비핵화선언에 합의했으며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sup>11</sup>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냉전에 승리한 자유진영의 힘은 한국의 대북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이 사실이다.

노태우 정부는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1990년 9월 30일 한소수교를 이루었고,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가 성립되었다.<sup>12</sup> 이는 북한에게 엄청난 독립감과 위협감을 안겨주었고, 북한은 이미 개발하고 있던 핵 프로그램을 가속

9 전재성 외 공저, 『(탈)냉전과 한국의 민주주의』(서울: 선인, 2011), 47-67쪽.

10 강근택 외 공저, 『북방정책과 7·7선언』(서울: 선인, 2020)

11 강근택 외 공저, 『남북한 UN 동시가입』(서울: 선인, 2021)

12 이희욱 외 공저, 『한중수교』(서울: 선인, 2021)

화하여 결국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대북 정책은 국제정세의 흐름에 힘입어 북한에 대해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공세적 전략을 추구했다. 1990년 한소수교는 한국은 물론 소련에 대한 북한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고, 1991년 9월 17일 UN 남북 동시가입 역시 북한의 끈질긴 반대가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한국의 전략이 성공한 결과였다. 한국은 UN의 틀 내에서 북한 핵문제를 다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이후 한반도 비핵화선언도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이 되었다. 1991년 12월에 합의된 기본합의서 역시 한국의 견해가 압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북한은 남북공존 및 상호체제인정의 선에서 탈냉전의 위험한 시기에 생존을 보장받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이후 1992년 1월 12일 김용순-캔터 북미 회담이 개최되기는 했지만 미국은 북핵 문제를 이미 수년 전부터 추적하고 있어 북미 간 합의는 수포로 돌아갔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미 협상을 추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협상 노력을 약화되는 상황에 이른다. 북방정책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북핵 문제로 이어졌다. 소련, 중국과 수교한 한국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통해 평양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UN 동시가입은 그러한 환경이 작동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게 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통해 탈출구를 모색했고 지금까지 30년에 이르는 북핵 문제가 시작되는 단초를 이룬다.

냉전 종식이 주는 함의는 전반적인 세계질서의 흐름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1980년대 들어 신냉전의 대결구도가 강화되지만 동시에 냉전 종식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동구권 국가들과 수교 및 중국, 소련과 경제관계 확대를 통해 점차 탈냉전의 추세에 대응하고자 노력했다.

데탕트 때와는 달리 한국 정부는 발전된 경제력을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미국의 도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냉전 종식의 흐름 속에서 미국의 허용적 공간이 열려 있었고 한국 정부는 이를 활용하는데 노력을 경주했다. 한국의 경제력은 중소 양국과의 수교, 동구권에 대한 협상에서 큰 힘을 발휘했다. 더불어 한국의 정치 민주화 역시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 속에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났고 정부는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여 보다 포용적인 차원에서 국내 역량을 결집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 IV. 2022년 현재 세계질서의 변화

##### 1. 탈냉전 30년 동안 배태된 거시복합이행의 국제질서

2022년 현재 세계질서의 변화는 앞의 두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데탕트와 탈냉전의 변화가 강대국 간 세력배분구조의 변화에 주로 기인한 것이었다면 현재 세계질서의 변화는 탈냉전 30년의 시기 동안 배태된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 1991년 12월 소련이 붕괴된 이후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의 기간은 냉전 종식 이후의 독특한 질서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탈냉전 30년 기간을 변전시킨 변곡점이 될 것인가는 후대의 평가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강대국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한 탈냉전기 자유주의 규칙기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려 한다는 점에서 현재 세계질서의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탈냉전 30년의 질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변화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첫째, 강대국 간 세력배분질서에서 미국은 단극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국력을

소유했다.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은 역사상 일국이 소유할 수 있는 상대적 국력의 최대치를 보유했다. 군사적으로 21세기 초 세계 군사비 지출의 50%에 달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었고, 군사 연구 개발비는 세계의 80%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의 군사력이 다른 어느 국가도 능가할 만큼 막강하다는 지표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냉전기 군사비 지출과 경제 문제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지만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때 정보산업 등 첨단산업의 발전과 구 공산권에 대한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여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이념적으로도 미국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의 표준으로 작용할 만큼 큰 힘을 발휘하였고 1990년대 초 미국이 주창한 소위 신세계질서와 클린턴 정부가 주창한 “개입과 확대”의 전략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를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주축이 되었다. 더욱이 미국의 힘은 동맹국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다. 미국은 세계 10위권 국가들의 거의 대부분을 동맹국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힘을 합친 리더십은 세계 여러 지역에 고르게 미칠 수 있는 확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여타 국가들의 지지, 중견국들과 약소국들의 참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층적인 국제제도들의 수립 등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발전시킨 힘이 되었다.<sup>13</sup> 미국의 상대적 약화로 자유주의 질서 역시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자유주의 패권의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의 전개 과정은 불확실하다.

둘째, 미국 단극체제에 대한 균형전략이 발생할 것이라는 다양한 논의가

---

<sup>13</sup> Marcos Tourinho, "The Co-Constitution of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75, no. 3 (Spring 2021), pp. 258-281.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미국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균형전략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는 없다. 단극체제 하 균형정책은 단극 국가가 다른 국가들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기존의 주권국가질서를 제국체제로 변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단극 질서 자체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상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탈냉전 30년 동안 9.11 위기, 2008년 경제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등이 발발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강대국들, 혹은 중견국들의 명시적 반발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각 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은 미국을 지원하여 지구적 반테러 전쟁 수행,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자적 협력 구도 창출,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등의 노력을 보였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은 미국 주도 질서에 반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미국 주도 질서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이슈별 반대와 교정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본다. 또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세력전이 혹은 강대국 경쟁의 부수 현상의 측면이 더 강한 부분도 있다.

오히려 미국 단극체제에 대한 반발은 9.11 테러에서 보이듯이 서구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한 보다 폭넓은 비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동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근본주의는 미국 주도 질서가 여타 지역의 이익과 주권을 무시한 것이라는 담론을 제시하며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각 지역의 지역질서를 복원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소위 나머지 3세계 국가들의 부상(Rise of the Rest)과 상통한다. 3세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서구의 제국주의 하 식민지로 전락했으며 비록 독립을 쟁취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제국들의 자의적 국경 설정, 독립 이후 식민모국과의 종속적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냉전기 두 초강대국인 미소의 대립이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약소국들의 국제정치적 이익은 냉전의 대립 속에서 희석되는 경향이 강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소 간 강대국 대결의 논리가 사라지면서 각 지역별로 많은 국가들은 그간 의제화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제

기했고 그 내용은 매우 다양했다. 탈냉전기 분쟁의 추이가 보여주듯이 국가들 간 전쟁은 급속도로 줄어든 반면 3세계,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은 급격히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비국가행위자들, 반군이나 테러리스트들의 등장도 증가했다. 9.11 테러 역시 이러한 경향 중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사건으로 알 카에다라는 집단의 특수성도 존재하지만 탈냉전기 국제질서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경향이 국제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시기가 시작되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후반 이후 국가별 정치경제, 더 나아가 국제경제질서를 특징짓는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케인즈주의에 기반하여 국가들 간의 국내적 거시경제 자율성을 인정하고 국제경제질서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타협을 이루었는데 소위 내장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에 기반한 브레튼우즈 체제였다. 그러나 점차 국가의 시장 개입이 불러오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197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이루어졌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 패러다임은 1990년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를 타고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미국은 단극체제의 경제적 기초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했고 선진국들은 물론 중견국, 약소국 모두 경제위기 및 세계화 흐름 속에서 무역, 금융 시장을 개방하고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했다. 시장의 효율성 논리에 따라 다양한 자유무역 레짐이 활성화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지구적 생산 공급망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규제가 약한 상황에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2008년 경제위기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가 금융위기, 더 나아가 실물경제위기로 확대된 것이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이후 지구화를 통제하는 문

제가 발생했다.

로드릭의 논의에 따라 지구경제의 세계화와 국가들의 주권, 그리고 국내 민주주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3종의 딜레마(trilemma)에 처한다. 관리되지 않는 지구화는 국가주권을 약화시키고 국내 경제 불평등의 심화, 제조업의 몰락과 중산층 약화 등 여러 국내 문제를 해결할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sup>14</sup>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약화되고 포퓰리즘, 민족주의, 배타주의 성향을 쉽게 띠게 된다. 약한 민주주의는 쉽게 권위주의화 되고 심지어 미국과 같은 선진민족주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에서 목격되었듯이 쉽게 포퓰리즘, 배타적 민족주의에 휩쓸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들의 외교정책은 점차 보호주의와 자국 이익 우선주의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넷째, 미국 단극체제 하에서 강대국 간 경쟁은 약화되어 미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독려하고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등 대중 관여정책을 꾸준히 추구하였다. 냉전 종식 직후 미국은 러시아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토의 동진을 자제하고 소위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Peace)을 설립하는 등 미러 관계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에서 지속가능한 안보체제를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러시아의 확장정책을 두려워한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나토에 가입하여 러시아의 안보불안을 가속화했다. 중국 역시 200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점차 강대국 지위를 추구하고 2010년대 들어서면서 미중 관계는 협력에서 경쟁관계로 변화하였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직전에 가시화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제한없는 우정”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다른 강대국들의 도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둘러싸고 많은 분석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

<sup>14</sup> Dani Rodrik, *The Globalization Paradox: Democracy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안보축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 전쟁에 대한 중국의 정책, 중러 간 전략적 연대의 진화 방향,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노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는가에 따라 세계질서의 향방의 한 축이 결정될 것이다.

## 2. 복합거시이행과 미중 전략 경쟁

이렇게 볼 때 현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질서의 문제는 거시복합이행의 문제이다. 문제의 층위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 중심으로 파악하면 직접적인 흐름,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가장 두드러져 보일 수밖에 없다. 사실 미중 경쟁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점증하여 향후 점차 격심해질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10월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통해 향후 10년이 결정적 시기(decisive decade)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 3연임을 결정한 10월의 20차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향후 5년이 관건적 시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양국의 발전은 물론 미중 전략 경쟁에서 향후 수년간이 승패를 결정지을 기초를 놓는 시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미중 경쟁과 갈등이 세계질서의 중요한 변수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냉전 30년 동안 배태된 더 큰 세계질서의 변화는 미중 관계를 규정할 것이고, 강대국 경쟁의 변수는 여타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수와 상호 연동되어 전개될 것이다.

우선 세계질서의 구조적 영향과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강대국 경쟁의 비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 양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흐름을 재편하여 경제발전을 추동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기존 질서



가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시장의 효율성, 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기초한 질서였다면 이제는 국가의 시장 개입이 확대되는 새로운 질서이다. 2008년 경제위기, 코로나 사태 등으로 미국은 이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장 개입을 시도해왔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경제 분야의 확대, 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경제규범의 제정 필요성이 증가했고 이를 위한 타협은 결국 정부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역시 생산요소의 집중 투입에 의한 급속한 산업화 모델이 한계에 도달해 기술혁신으로 성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또한 중국은 도농 격차, 빈부 격차, 지방 간 격차, 전통 산업과 플랫폼 기업 등 신기술 분야 기업 간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 개입은 더욱 증가했다. 중국 역시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영향 속에서 공급망 재조정,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소위 홍색 공급망이라는 자체 완결적 공급망을 추구하면서 쌍순환 경제를 추구하여 대외 수출은 물론 내수 시장 확대의 목표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미중 전략 경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미중 양국은 축적된 세계질서의 변화에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기존의 자유주의 국내외 질서를, 중국은 기존의 시장사회주의와 당내 민주주의와 같은 국내 질서를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미중 전략 경쟁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으며 미중 양국은 경제적 어려움을 전략 경쟁에 처한 상대방의 공세적, 불공정 정책의 결과라는 담론을 생산하는 경향이 크다. 이는 국내정치적으로 유용하고 위기 해결의 결집에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둘째, 미중 전략 경쟁의 영역은 점차 확대일로에 있고 당분간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미중 양국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부정적 결과에 대처하는 과제와

함께 강대국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경쟁은 무역 분야에서 시작되어, 현재 기술과 금융 분야에까지 번지고 있으며, 이념과 군사안보 부문에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기술 분야의 경쟁은 향후 경제는 물론 군사영역의 승패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도 대두하고 있다. 미국은 핵심 기술 분야인 반도체 생산을 시작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 대중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소위 칩4동맹 등은 중국에 대항하는 핵심 물자의 공급망 재조직, 반도체 첨단기술의 중국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들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수출제한, 무역전쟁, 기술협력제한 등을 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위배되는 자의적 경제정책으로 비판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중국 견제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새로운 지구경제질서의 규칙과 규범이 출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경쟁은 지금의 경쟁성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미중 안보 경쟁은 회색지대, 통상전, 핵무력 등의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위협지대인 남중국해, 동중국해, 양안, 한반도, 그리고 중국-인도 국경은 향후 분쟁당사국들의 충돌에서 미중 간 군사충돌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들이다. 미국은 강력한 핵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군사 신기술 분야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층적 안보 체제를 수립하고, 이 지역과 유럽 지역의 안보 구도를 연결한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육해공, 사이버, 우주, 전자기 영역을 통합하는 전 영역 작전 및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구상은 근본적으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견제를 극복하기 위해 핵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있으며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력의 급속한 증강을 위해 강군몽 2027의 비전을 세우고 중국식 다영역작전, 해군력의 급속한 증강, 중국 전구체제의 정비 등의 노력을 서두르고 있다.

미중 군사경쟁 과정에서 미중 간 핵무기 균형이 상호확증파괴의 수준에 도달할 경우, 중국은 회색지대 영역과 통상전쟁 영역에서 더 공세적으로 나올 확률이 크다. 현재는 중국의 핵군사력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열세에 처해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역 분쟁에서 미국과 전면전의 가능성을 회피하고 부분적인 군사작전에 머무르고 있다. 향후 미중 간 상호 본토 공격의 군사력 균형이 이루어질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충돌 양상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장기적인 과정에서 미중 양국의 세계질서에 대한 대응, 미중 양국 간 전략 경쟁, 그리고 인류가 당면한 공멸의 위기 등이 어떻게 연관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미중 양국은 향후 단중기적으로 전력을 다한 상호 경쟁을 추구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동향과 동맹국,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 미중 어느 국가도 혼자만의 힘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복합적인 경제적 상호의존망, 환경, 보건 위기, 핵확산 등 국제적 공공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패권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sup>15</sup> 다른 선진국들과 중견국들, 그리고 약소국들의 협력과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 미중 양국은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더 효율적이고 정당성이 있는 리더십의 전망을 제시하고 지지국을 확보하는가의 경쟁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향후의 리더십은 집단적 리더십이고 그 집단적 리더십을 누가 이끄는가 하는 소위 메타리더십을 향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sup>15</sup> Daniel, W. Drezner, Ronald R. Krebs, and Randall Schweller, "The End of Grand Strategy: America Must Think Small." *Foreign Affairs*, vol. 99, no. 3(2020): pp. 107-117.

## V. 현재의 세계질서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한국의 입장에서 미중 간 전략 경쟁은 대처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이다. 앞의 데탕트나 냉전 종식의 경우처럼 강대국 관계의 변화는 한국의 국익 추구에 딜레마를 안겨줄 수밖에 없는 어려운 변수이다. 미중 양국은 자신의 진영을 만들어가면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의 양자택일 선택은 이익과 손실을 모두 안겨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유념해야 할 요소는 미중 양국 스스로가 현재의 가장 큰 문제가 상호 전략 경쟁이라고 인식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더 깊은 세계질서의 변화 자체에 있다는 점이다. 향후 세계질서를 재편하는데 미중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어느 국가도 안보와 번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기존의 다자주의 규칙기반 질서가 중요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중 양국이 근본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중 양국 모두 규칙기반 질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경쟁이 힘에 의한 경쟁이 되지 않고 규칙에 기반한 경쟁이 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전쟁을 막고 기존 질서를 무너트리는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강대국 간 경쟁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한국은 미중 간 경쟁을 통해 기존 질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앞으로 수립되어야 할 많은 신흥 분야의 규범, 레짐 형성에 미중이 경쟁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선진국들, 중견국들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전개될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주의 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분간은 양자택일의 전략이 불가피한 영역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국익의 계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추구하면서 다층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근택 외 공저, 『남북한 UN 동시가입』, 서울: 선인, 2021
- 강근택 외 공저, 『북방정책과 7·7선언』, 서울: 선인, 2020
- 마상윤, 「데탕트의 위험과 기회-1970년대 초 박정희와 김대중의 안보인식과 논리」 『세계정치』 14호 (2011), 101~135쪽.
- 이희옥 외 공저, 『한중수교』, 서울: 선인, 2021
- 전재성, 「1960년대와 1970년대 세계적 데탕트의 내부 구조」 『국제정치논총』 제45집3호 (2005), 33~56쪽.
- 전재성,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미국의 대한(對韓)외교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집 2호 (2004), 63~89쪽.
- 전재성 외 공저, 『(탈)냉전과 한국의 민주주의』, 서울: 선인, 2011, 47~67쪽.
- Drezner, Daniel, W., Ronald R. Krebs, and Randall Schweller, "The End of Grand Strategy: America Must Think Small." *Foreign Affairs*, vol. 99, no. 3(2020): pp. 107-117.
- Fischer, Beth A. *The Reagan Reversal: Foreign Polic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97
- Gaddis, John Lew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Garthoff, Raymond, L., *Detente and Confrontation: American-Soviet Relations from Nixon to Reaga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4,
- Rodrik, Dani, *The Globalization Paradox: Democracy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 Schweizer, Peter. 저, 한용섭 역, 『레이건의 소련붕괴전략』 서울: 오름시스템, 1994[2006].
- Thompson, Kenneth W. ed. *Foreign policy in the Reagan presidency : nine intimate perspectives*. Lanham, Md.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3.
- Tourinho, Marcos. "The Co-Constitution of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75, no. 3 (Spring 2021), pp. 258-281.



---

# 대전환의 시대, 남북관계의 회고와 성찰

●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I. 남북관계의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과 남북관계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이다. 1948년 한반도에 두 개의 독립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한 사이에 한국전쟁을 포함한 많은 비극적 사건들이 있었다. 일시적으로 합의와 평화의 국면이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남북한 사이의 적대감과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왔다. 이제 곧 정전협정 70년과 한미동맹 70년을 앞두고 있고, 북한이 생존전략으로 선택한 핵개발을 위해 NPT 탈퇴를 선언한 지도 30년이 되어 간다.<sup>1</sup> 국가 공동체와 시민적 가치를 존중했던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역에서 물러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 가치’와 ‘세계적 가치’ 사이에서 넓은 세계관의

---

<sup>1</sup>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1994년 북미 간 제네바합의가 있었고, NPT 회원국 탈퇴 전례가 없었던 관계로, 이 선언 직후 북한이 NPT 비회원국이 되었다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2003년 1월 10일 북한의 두 번째 탈퇴 선언 이후, 국제사회에는 대체로 북한의 탈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스펙트럼을 자유롭게 오가는 신세대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통일보단도 더 중요한 가치들이 많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원칙론적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 우리 국민 대다수 역시 현 시점에서 북한을 상대로 갑자기 대화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행동에는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는 현재 계속되는 남북한 사이의 위기 고조는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로 보인다. 여기서 ‘궁극적인 목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의미한다. 또 다른 요인은 북한에 가해지는 제재의 압박을 버티는 일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부분이다. 경제적 타격은 물론 주민들의 심리적 타격도 상당해서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북한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계속 던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복잡한 국내정치 상황 역시 염두에 뒀을 것이다.<sup>2</sup>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 상황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세계화 30년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자유주의국제질서’의 조정 필요성이 국제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러한 목소리는 ‘COVID-19’ 이후의 ‘포스트-코로나’ 질서 논쟁과 맞물려, 어떤 형태로든 국제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시진핑의 3번째 임기 시작은 대만문제를 포함한 미중 갈등의 국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 당연히 보인다. 북한 역시 국제질서

---

2 북한은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과거의 전례대로 집권당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예상과 달리 선거는 상원의 민주당 우위, 하원의 근소한 공화당 승리(5석 미만)로 끝났고,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상당한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변화를 자국의 이익 극대화에 활용하려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편인데, 김정은 집권 시기 핵무력 완성을 위해 쏟았던 총력 에너지는 구조화되기 시작한 미증갈등 국면과 깊게 연동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3</sup> 국내 정치 상황 역시 매우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을 ‘직접 민주주의’ 노력으로 채우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정치’가 실종되는 또 다른 차원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외적으로 ‘대전환’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련하여 한국과 국제사회가 처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 전개된 남북관계의 역사와 교훈에 대해서 두루 살펴볼 생각이다. 이 과정에서 올 해로 50년을 맞은 ‘7.4 공동성명’, 한반도 차원의 데탕트였던 ‘북방정책’, 탈냉전 직후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인 ‘6.15 공동성명’ 등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현재 남북관계가 직면한 핵심 변수와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결언을 대신해서 한반도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우리 정부의 방향성 정립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 II. 대전환의 시대

### 1. 국제질서의 대전환

2차 대전 이후에 정착되고 구조화된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했다. 세계화 이후 지난 30여 년 동

3 박인휘, 「김정은 시대의 북한 외교전략」, 박재규 외 공저, 『새로운 북한 이야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8), 251~280쪽.

안 거의 모든 유형의 상품, 자본, 인적 교류가 일반화 되었고, 그 결과 마치 국경이 사라지는 그야말로 하나의 지구촌이 생겨나는 듯 했다. 하지만 대체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일종의 ‘무분별한’ 세계화에 대한 반성의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표출되었고, 이와 연관되어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 미중갈등의 구조화, 국가들 간의 세계화에 대한 차별적인 수혜 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상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이 그 이전 시기에도 드러났지만, 세계화의 여러 문제점이 국제질서 안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들로 이해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화 자체에 대한 일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발생한 것이다.<sup>4</sup>

전후 질서에서 구조화된 자유주의국제질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확산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내용적으로 자유무역, 금융 이동의 자유화, 국가들 간 관계의 제도화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질서는 냉전기 동안 서구진영에만 머문 경향이 있었고, 냉전 종식과 함께 지구촌 곳곳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의 생산 활동과 외교관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추구한 핵심 전제로는, 1)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정체성을 한 국가 단위, 2) 배분 과정에서 시장의 작동과 자유경쟁, 3) 다자주의 국제제도, 4) 강대국들 간 상호확증파괴를 통한 안정성 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sup>5</sup> 국제질서의 이러한 현실적인 작동과정은 동시에 학문 세계 안에서 다양한 이론들로부터 뒷받침을 받았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강대국의 리더십과 국제질서 안정성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 패권안정이론,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 회피 가능성을 강조하는 민

4 Joseph S. Nye, Jr., "American and Chinese Power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3, no. 4 (2010), pp. 143-153.

5 전후 질서에서 정착 및 발달한 자유주의국제질서의 포괄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참고, John G. Ruggie, ed.,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주평화론, 예측력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국가들 간 협력 증대를 증명하고자 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이론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초강대국 미국의 리더십은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곤 했다. 그런데 2016년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국가이기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국제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 제공을 포기하는 듯했던 상황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균열의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sup>6</sup>

돌아켜보면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지난 30여 년 동안 일종의 ‘개방적 다자주의’가 거대한 물결처럼 넘쳐났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다. 예를 들어, 미국이 ‘미래 예측’과 ‘투명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을 국제질서에 적극 편입시켰는데, 2001년도 WTO 가입을 시작으로 중국은 민주주의와 무관하게, 또한 시장원리의 준수와 무관하게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적극 수용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21세기는 일종의 ‘개방적 다자주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시장이 통합되고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를 잡는 듯하더니,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심각한 문제들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영국의 EU 탈퇴 결정(Brexit), 일본의 극우 민족주의, 러시아의 국가 이기주의, 중국의 패권주의 프로젝트(일대일로) 등이 동시에 분출되었고, 이로 인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후퇴를 예고하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생겨난 것이다. 급기야 2020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러한 위기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형국이다.<sup>7</sup>

6 물론 이러한 설명이 미국의 역할을 지나치게 미화한 경향이 있고, 공공재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부담을 졌지만, 결국에는 미국에게 가장 큰 이익을 보장해 주는 ‘사유재(private goods)’로서 기능했다는 비판 역시 존재하고 있다.

7 이런 차원에서 코로나 사태가 그 자체로 현 국제질서의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보다는 최근 수년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자유주의 국제질서 후퇴의 징조들과 함께 맞물린 현상에 주목하면서, 보다

결국 ‘세계화는 후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세계 ‘생산 공급망(supply chain)’의 과도한 밀집 현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전달했다. 인류는 세계화를 멈춰야 하는가?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역사 속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는데, 비록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제한된 세계화였기는 하지만 20세기 초 과도한 상호의존에서 빚어진 문제점들이 1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된 경험이 있다. 플라니는 이러한 비극적 결말을 세계화가 초래한 ‘대변혁’으로 설명했다. 당시 세계화의 반작용이 1차 대전으로 표출되었고, 그 후 또 다시 파시즘과 2차 대전을 포함한 세계사의 비극을 겪었지만, 돌이켜 보면 국가들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세계시장 통합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코로나는 전통적인 국가 단위의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일종의 ‘사악한’ 성격의 문제이다. 그나마 코로나는 ‘발생, 가시화, 문제화, 확산 및 악화’ 단계가 시퀀스를 보이면서 단계별로 분석과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초연결 시대에 복잡성과 상호연계성이 증폭된 신안보위협이 국제사회 수면 하에 잠복해 있다가, 특정 시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서 경험한 심각한 수준의 ‘진원지 논쟁’에서 보듯이, 향후 인류가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닥쳤을 때 정보의 왜곡과 책임 회피를 위한 거짓 논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sup>8</sup>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불이 붙은 ‘강대국 정치의 귀환’ 역시 대전환의 국제질서를 예고하고 있다. 양차 세계 대전을 겪은 다음 강대국들은 전쟁을 국가 정책 수단으로 채택하기 주저했다. 냉전 전체 기간 동안 발생했던 두 개의 유이(有二)한 전쟁이 베트남전쟁과 6.25전쟁이라는 사실

---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하게 된 위기를 관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8 윤정현, 「초국가적 난제 시대의 초국가적 거버넌스」, 『국제문제연구소 워킹페이퍼』 166호 (2020).

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 이외에도 국가이익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확산할 정책 수단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세계화 30년 동안 미국이 유럽 지역에서 추진한 ‘러시아 묶어두기’ 전략은 성공했고, 러시아의 안보불안이 증폭되면서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다. 미중갈등이 첨예한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고, 바이든 정부 등장 이후 ‘인도태평양 전략’이 더욱 강조되면서, 아마도 러시아는 미국이 자신에게 그랬듯이 중국이 미국을 아시아 지역에 ‘묶어 두는 전략’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쟁을 일으켰을 것이다. 외교안보정책에 투입할 리소스가 고갈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비록 과거 70~80년대식 강대국 정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대국 간 치열한 경쟁의 전개는 국제질서 대전환의 또 다른 한 장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 2.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

국제질서의 거대한 변화 못지않게 국내 정치 차원에서도 중요한 전환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의 국내 정치에도 큰 변화를 몰고 왔는데, 2008년을 기준으로 보자면 냉전 종식을 맞이한 지 20년, IMF 금융위기를 경험한 지 대략 10년의 시간이 흐른 때이다. 한국은 세계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한 대표적인 나라이고, 공교롭게도 글로벌 금융위기 즈음 우리 사회는 ‘대의민주주의 위기’와 ‘양극화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2008년 전후 가시화되기 시작한 참여민주주의 요소는 한국이 성취한 민주주의 발전,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차원에서 적잖은 우려를 자아내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의민주주의 위기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1970년대부터 해외에서도 학문적 대상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 위기 문제와 대안적 민주주

의에 대한 논의가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차츰 등장하기 시작했다.<sup>9</sup> 2008년 광우병 이슈로 촉발된 거리의 정치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 다시 대규모로 확장되어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인 동인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정치적 사안에 관심이 높고 정치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관심이 많은 진보성향의 시민들이 참여 민주주의적 의사 표현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흥미롭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참여 민주주의가 보수적 성향의 시민들의 어젠다로도 채택되었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우파 포퓰리즘이 유행하고,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보수정당의 지지도가 높아지면서, 정치적 이슈 선점에 관심이 높아진 보수주의 성향의 시민들이 참여 민주주의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보 성향의 시민들에게 선호되는 참여 민주주의적 의사표현이 최근에 와서는 보수 성향의 시민들에게도 선호된다는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 문화적 안정성이 불안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광범위한 정보의 바다에서 확증 편향적 정보 선택 경향은 ‘포스트-진실’ 시대에 이성적 판단과 균형감 있는 정치적 견해를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sup>10</sup>

코로나 위기 역시 국내 정치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국가의 관심 혹은 정부 책임성(accountability)의 문제’와 ‘민주주의 위기와 거대국가 출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코로나를 계기로 각 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가에 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

9 대표적인 연구로는 참고, 박찬표,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초상: 민주주의 과잉인가 자유주의 결핍인가」, 『아시아연구』 제51권 4호 (2008), 148~181쪽;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2010); 최태욱,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서울: 책세상, 2014).

10 ‘포스트-진실 시대’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제공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참고, Lee McIntyre 저, 김재경 역, 『포스트 트루스』, (서울: 두리반, 20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일반 시민의 정보의 종류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개인의 처방전 기록, 진료기록부, 출입국 관리기록,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정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 마디로 국가 보건 위기를 빌미삼아 국가가 개인의 신체, 건강, 이동, 위치에 관한 막대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소위 ‘데이터 통치’의 시대가 본격화된 것이다.

코로나 위기 직후 미국과 유럽에서 감염자 수가 폭증하자 서구 국가들은 반자유주의적 봉쇄 조치들을 주저 없이 강행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통해, 잠복해 있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독재적 요소들이 일거에 드러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 주요국들을 문명적 기준으로 작용하여, 국가들 사이에 편을 나누는 새로운 장벽이 되었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게서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감시 권위주의(surveillance authoritarianism)가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났다. 코로나 위기는 세계화로 인한 탈국가적 공동체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기존의 믿음을 붕괴시켜, 지역주의나 민족주의 혹은 개인들의 고립된 삶이 득세할 수 있다는 위협의식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역할이나 정치시스템의 역할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정과정에서의 정부의 영향력 확대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sup>11</sup>

발전국가와 세계화국가를 지나온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장은 코로나를 계기로 방대한 정보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본격 전개된 데이터 자본주의는 이미 수년전부터 정치적 영향과 결정력의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었고,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이 시민의 관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었다

11 손현주, 「코로나19와 정치의 미래」, 『지역사회연구』 제29권 2호 (2021), 120~123쪽.

면 소위 ‘데이터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  
지 인권, 자유, 국가개입 사이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아보기는 어  
렵다는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향후 많은 노력이 필  
요해 보인다.

### Ⅲ. 남북관계의 전개와 주요 사건

#### 1. 남북관계의 전개: 냉전기

한반도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에는 많은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  
다. 한국전쟁처럼 민족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도 있었고, 짧은 시  
간이었지만 공존과 화해의 순간도 있었다. 여기서는 남북한 사이에 있었던 역  
사적 합의 몇 가지를 시대 순으로 되짚어 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7.4 남북  
공동성명’, ‘7.7선언과 북방정책’, ‘남북기본합의서’, ‘6.15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이렇게 5가지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올 해로 50년을 맞이한 ‘7.4 공동성명’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주·평  
화·민족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한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  
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이 쌓아올린 갈등의 골은 매우 깊었고, 특히 1970년  
대 초반은 한국전 이후 약 2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으로 한반도에 ‘대결과 배  
척’의 가치가 지배적이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미국에 닉슨 행정부가 들어서  
고, 미중관계 및 유럽에서의 데탕트는 한반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  
으며, ‘7.4 공동성명’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숨 가쁘게 전개되던 데탕트가 한  
반도로 전환된 결과였다. 물론 ‘7.4 공동성명’의 배경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데탕트에 따른 요인이고, 또 어디서 어디까지가 남북한 지도자의 순수한 의지



에 따른 결과였는지를 가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sup>12</sup> 다만, 같은 해 10월 ‘유신 헌법’이 발표된 점과 대화의 모멘텀이 너무도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 모두 화해국면을 만들려는 진정한 의지가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13</sup>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단 이후 남북한이 통일 문제에 대해 최초로 합의한 상징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아무리 데탕트라는 냉전 역사에서 중요한 국면 전환의 모멘텀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냉전의 최전선 역할을 담당했던 남북한이 ‘통일’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서로 교환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성명문에 포함된 ‘자주적 의지’와 ‘평화적 방법’은 그 이후 대부분의 남북한 합의문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상호 비방과 도발의 금지, 남북한 간 다양한 교류의 실시, 직통 전화 개설, 남북적십자회담 등은 지금까지의 남북한 관계 설정에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신체제는 한국 현대사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냉혹한 시간이었다. 베트남 전쟁의 영향으로 박정희 정권은 중화학공업과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다졌고, 대통령 간선제로 상징되듯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침해된 시간이었다. 동시에 한국 경제는 오일쇼크를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호황기를 잘 활용하여 1970~80년대에 걸쳐 후진국에서는 전례가 드문 경제성장을 구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7.4 공동성명’에 또 다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한반도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남북한 각각에 소위 ‘분단체제’가 구조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7.4 공동성명’은 분단 구조 고착화의 시작이라는 매우 흥

12 ‘7.4 공동성명’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안보딜레마 이론의 ‘방기’ 위험성, 일본의 대중국 접근, 남북한 지도의 대내적 지도력, 데탕트의 활용, 통일에 대한 열정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3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돈 오버도퍼는 그의 유명한 저서 ‘두 개의 한국(The Two Koreas)’에서 ‘7.4 공동선언’을 가리켜 ‘너무도 짧았던 시작(The End of Beginning)’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참고,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Y.: Basic Books, 2001), p. 27.

미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70년대의 시작과 함께 남북한 사이에 힘의 균형이 이뤄지게 되었는데, 남북한 사이의 내적 균형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환경의 외적 균형 역시 달성된 시점이다.<sup>14</sup> 남북한 지도자는 힘의 균형이 이뤄진 다음에야 비로소 '통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쫓았던 '7.4 공동선언'의 시간이 남북한 각자 체제 안에서 법적 정비의 완비로 이어졌다는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은 남북한 각자의 정치체제 완결성을 높이는 분단구조 완성으로 이어지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sup>15</sup>

데탕트 이후의 냉전기 국제질서는 격변의 시기였다. 미·중·소 간 삼각 외교전과 세력균형이 전개되었고, 80년대 중반 이후 소련과 동구권에서의 민주화 바람은 견잡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되었다. 특히 70년대 중후반부터 남미 국가들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물결은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나라들의 민주주의 발전을 야기했다.<sup>16</sup>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87년 체제'는 제도적 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분수령이 되었다. 유신 이후 최초 직전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특히 냉전 질서 해체 상황을 한반도에 수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7.7 선언'은 이런 배경 위에서 등장한 것이다.<sup>17</sup> '7.7 선언'의 핵심 내용은 북한과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14 관련 설명으로는 참고, 구갑우, 「한반도적 맥락의 비판적 안보담론: 평화국가담론 재론」, 『한국과 국제정치』 24권 3호(2008).

15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헌법'이 확정되었고, 북한에서는 같은 해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신헌법'이 채택되었다. 향후 남북한 내부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분단체제'는 소위 '적대적 공존'의 한반도 안보체제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관련한 최초의 사회과학적 분석으로는 참고, 강만길,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서울: 창비, 1978).

16 참고, Samuel Huntington 저, 강문구·이재영 역, 『제3의 물결: 20세기 후반의 민주화』(서울: 인간사랑, 2011)

17 '7.7 선언'의 원래 명칭은 '민족자본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이다.

개방정책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국형 민주주의와 글로벌 탈냉전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7.7 선언’은 우리 스스로 제도적 민주주의 완성을 이뤘고 동시에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측면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통일 논의를 정부가 독점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을 경쟁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한 점, 그리고 ‘7.7 선언’의 정신을 정책적으로 계승한 ‘북방정책’을 통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확장한 점은 오늘날까지 높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선언을 통해 후일 활성화된 ‘남북고위급회담’은 냉전 종식 직후 ‘남북기본합의서’로 이어졌다는 점 역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1970년대 초반의 미중간 외교관계 개선이 ‘큰’ 데탕트였다면, ‘7.7 선언’과 이에 따른 한중 및 한러 수교는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지형을 바꾼 ‘작은’ 데탕트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물론 북방정책의 성공은 냉전 종식으로 외교적 고립감이 심화된 북한에서 더욱 큰 안보 불안감을 가져다주어서, 결국 핵개발 카드를 꺼내들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있기도 하지만, 북핵문제가 여전히 진행형인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후일로 미루고자 한다.

## 2. 남북관계의 전개: 탈냉전기

1991년 12월 10일에서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했다. 두 달 후 평양에서 열린 제6차 회담에서 양측의 최고대표가 서명함으로써 기본합의서는 발효되었고, 이렇게 본다면 올 해로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약 20년 전에 있었던 ‘7.4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3대 원칙이 강조되었고, 무엇보다도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

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점”을 확인했다. 25개 조항에 걸쳐 정치, 군사, 교류협력에 이르는 구체적인 약속이 적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한국 내 미군 핵무기의 완전 철수, ‘팀 스피리트’ 훈련 중단 등의 조치로 기본합의서가 성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본합의서’야말로 남북한 분단 역사에서 이룩한 가장 의미 있는 합의이자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역시 짧은 기대였지만,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잠시나마 상당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돌이켜보면 남북한 사이의 불신의 벽은 너무 높았다. 합의서 체결 이후 연속적으로 진행된 ‘분과위원회’ 협상에서 결국 군사훈련을 둘러싼 팽팽한 입장 차이가 조율되지 못했는데, 지금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방어적 목적과 일상적 차원의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불신과 거부감이 상당했었던 것이다. ‘기본합의서’ 합의 일 년 후인 1992년 12월에 개최 예정이던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취소되었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남북기본합의서는 일종의 상징적인 문서로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 역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먼저, 냉전기 동안 한반도에 존재했던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를 제공했다. 미군이 보유했던 전술핵무기의 완전 철수는 미국이 추진한 글로벌 차원의 핵운용 전략과 맞물린 성격이 있지만, 어쨌든 ‘핵무기의 제거’가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남과 북이 문서로 합의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로는 기본합의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30년의 남북관계에 한 가운데에는 항상 핵문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기본합의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부터 북한의 핵개발은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문제는 곧 ‘북핵문제’와 동일시된다는 현실

은 일종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 기조와 맞물려 남북한 역시 매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놓고도, 약 1년 만에 그 합의는 현실적으로 사문화되었고, 그 이후 30년 동안 남북관계의 거의 모든 대화와 협상은 핵문제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북한문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핵문제’만을 논쟁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사안과 달리 핵문제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라는 국제행위자의 한반도 관여가 불가피하다는 점, 어쩌면 북한은 30년 전부터 이러한 점들을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1997년 대선에서 최초의 야당 후보인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를 계기로 ‘햇볕정책’은 대북정책을 의미하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었다. 햇볕정책의 논리는 상대적으로 심플한 편이다. 비핵화를 포함한 정치 및 안보 영역에서의 합의는 지난한 과제이니 경제와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정책이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햇볕정책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진 남북관계 역사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 한 가운데에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6.15 남북공동선언문’이 자리 잡고 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관점과 입장에 따라 ‘6.15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분단 이후 최초의 정상회담이라는 사실과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요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5개 합의문에 ‘핵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 북한의 연방제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듯한 입장을 취한 점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당시로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불가피한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대중 정권의 등장 이후부터 ‘햇볕정책’은 진보

세력 대북정책의 상징이 되었다. 물론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 추가적인 입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비’와 ‘바람’이 아닌 ‘햇볕’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진보진영의 입장에는 대체로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6.15 남북정상회담’은 불가피하게 우리 사회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았다. 두 가지 문제를 핵심적으로 살펴보자면, 소위 ‘남남갈등’과 ‘변화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점이다. 남북관계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일면 당연한 측면이 있지만, 대북정책의 노선 자체가 이슈가 되어 우리 사회 내부가 정치, 사회, 경제적 분열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 햇볕정책은 ‘퍼주기 논쟁’, ‘실효성 논쟁’, ‘분단 정당화 논쟁’ 등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남남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와 연동되어 대규모 대북 지원 이후에도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도발이 그치지 않자, 상대적으로 보수적 시각을 가진 국민들은 ‘햇볕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대북관을 변화시키는 정책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게 된 것이다.<sup>18</sup>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에는 그야말로 많은 사건과 협상이 있었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다양한 대북정책을 전개했지만, 북한을 변화시키거나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데에는 모두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실상 폐지되었지만, ‘6자회담’이라는 다자 논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시도 또한 있었고, 실제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된 적도 있었다. 보수 정권이 선택했던 ‘원칙에 기반한’ 다양한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진보 정권이 선택했던 ‘관여와 햇볕’을 통한 대북정책 역시 성과를 내지 못하기는 마

18 김갑식,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23권 2호(2007), 31~60쪽

찬가지이다. 결국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전 세계를 향해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게 되고, 남북관계에 있었던 지난 70여년의 모든 대화와 합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커다란 회의감을 들게 만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영웅이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정무직 혹은 선출직 공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백악관 주인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선택했다.<sup>19</sup> 남북관계 역사의 주요 사건을 다루면서, 북미 간 사건이었던 ‘북미정상회담’을 다루는 이유는 너무 당연해 보인다.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상징적인 중요성은 물론이고, 북미정상회담 역시 결국은 ‘남북미 관계’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두 차례에 걸친 북미정상회담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할 생각은 없다. 더구나 정상회담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sup>2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합의한 ‘4개 조항’은 북한과 미국이 각각 앞으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잘 명시하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향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북미의 약속,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미국의 의무,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해야 하는 북한의 의무, 이 세 가지가 간

19 사실 북미정상회담이 최초 어떤 상황에서 먼저 제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선택했다는 표현은 엄밀히 얘기해서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다. 다만,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시도에 미국 대통령이 동의한 자체만으로 한국전쟁 이후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점에는 동의할 필요가 있다.

20 존 볼턴은 최근 출간된 그의 자서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사진짜기용” “홍보행사”로 맹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서 볼턴 보좌관이야말로 북미관계 발전을 방해했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볼턴의 저서가 출판되지 못하도록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볼턴의 비난과 관련해서는 참고, John R. Bolton 저, 김동교 외 역, 『그 일이 일어난 방: 존 볼턴의 백악관 회고록』(서울: 시사저널사, 2020), 11장. 판문점과 하노이.



결하지만 명료하게 정의되어 있다.

북미정상회담 성과 역시 너무도 짧은 시간동안만 지속되었고, 북한에 대해서는 차제에 확보한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완전한 비핵화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는 비난이 현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평화체제 역시, 과연 트럼프 스스로 평화체제, 미중 관계적 맥락, 대북 제재 해제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논란이 이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모든 이슈는 북핵 문제가 장악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북한 스스로 의도한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남북미 모두는 핵문제가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IV. 역사적 교훈과 향후 방향성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글자 그대로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본 글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우선은 한국이 처한 대전환의 시대가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했고, 이어서 결코 짧지 않은 한반도 분단 역사에서 핵심적인 사건 몇 개를 되짚어봄으로써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교훈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지막으로 대전환의 시대와 한반도 문제가 교차하는 상황을 직시하고, 과거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대신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지난 70여년의 남북관계 역사에서 서로 다른 교훈을 얻고자 할 것이다. 필자는 핵심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과 ‘기능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국제질서 차원에서 ‘대전환’



의 핵심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조정과 미중갈등이다. 그런데 한반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적 요소에 의해 분단된 대표적인 지역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화 30년의 시간 동안 개방과 상호의존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누린 나라이기도 하다. 또한 남중국해 및 대만과 함께 미중갈등이 가장 첨예하기 맞서는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반도 문제가 안고 있는 이러한 국제적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은 남북관계 발전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내년 3월이면 시진핑 주석의 3번째 임기가 공식 시작되고, '포스트-코로나' 질서에서 다자주의의 새로운 유형이 어떤 형태로든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아시아의 전통적인 지역 구분이 사라지고 인도와 태평양이 하나로 연결되는 전략 지형이 생겨나고 있고, 혹은 한국과 나토의 연결처럼 개별 국가와 다자주의가 연결되는 '원+다자주의' 형태도 가능할 수도 있다.

소위 '세계화 2.0'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했던 세계화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중갈등의 구조적 악화는 한반도 평화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임에 틀림없다. 외교안보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인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국가 과제이다. 하지만 과거 '사드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한반도 차원의 문제가 미중갈등의 문제로 전환되는 순간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의 몫이 된다. 결국 미중 사이에서 '거리의 균형'이 아닌 '이익의 균형'을 찾아야 할 때이다.

또 하나의 핵심 교훈은 '기능주의의 문제점'이다. 과거 햇볕정책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우리는 전형적인 기능주의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했다. 경제적 지원과 같은 하위정치(low politics)가 상위정치(high politics)를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보 정

부는 물론 보수 정부 역시 기능주의 대북정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과거 ‘비핵·개방·3000’이나 ‘통일 대박’ 모두 북한을 경제와 지원의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차원에서 기능주의적 접근에 기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십 년의 경험에서 보듯이 경제적 지원이 정치안보 영역으로 전환되는 전화효과(spill-over effect)는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전화효과 부재의 원인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미래 남북관계의 어느 단계에서는 기능주의적 정책이 의미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 다만,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보다 포괄적인 대북 접근, 예를 들면 ‘안보게임’, ‘경제게임’, ‘국제게임’의 동시 전개와 같은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해 보인다.

향후 남북관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안보(security)는 사회 안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경쟁하는 다양한 가치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확인되고, 또한 확보된다. 한반도 문제의 특성상 지금까지 최고 지도자가 대북정책과 관련한 안보 문제에 전적으로 책임진 경향이 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와 정부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안보 논의 방식으로는 점차 통일에 관심을 잃어가는 MZ 세대의 세계관을 포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머지않은 장래에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정책을 앞세운 정당이 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유사시 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서 전쟁과 통일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는 젊은 세대가 평화문에서 촛불을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잘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논의가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구성(social construction)되어야 한다. 사회적 구성은 논의의 ‘개방 및 자유’와는 다르다. 한국의 경우 유럽이나 중동과 달라서 여전히 안보의 대상(object of security)

이 국가라는 점은 이해할만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사회적 구성을 통해서 확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과 국내정치 사이에는 건강한 균형감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때로는 국내정치 사안으로 접근하고, 또 때로는 외교안보 사안으로 접근하는 불안정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북한 문제는 내치(內治)인가 외치(外治)인가? 이 질문에 정답은 없어 보인다. 내치로 접근한다면 노력에 비해 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가 안고 있는 국제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내치의 차원에서는 북한의 비이성적인 논리와 위장 전술 역시 쉽지 않은 난제가 된다. 외치로 접근한다면, 이 역시 핵문제가 모든 이슈를 가로막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핵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북한 문제의 다양한 측면이 핵문제에 가려져 '핵 환원주의'의 함몰에 빠질까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또한 만들어 지기도 한다. 국내외적으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보다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한반도 분단 역사에서 일궈낸 성과들이 아쉽게도 대부분 사문화되었거나 무용지물이 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과거 성과들은 남북한 모두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참고문헌

- 강만길,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서울: 창비, 1978.
- 구갑우, 「한반도적 맥락의 비판적 안보담론: 평화국가담론 재론」, 『한국과 국제정치』 24권 3호, 2008.
- 김갑식,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23권 2호, 2007, 31~60쪽
- 박인휘, 「김정은 시대의 북한 외교전략」, 박재규 외 공저, 『새로운 북한 이야기』,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8, 251~280쪽.
- 박찬표,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초상: 민주주의 과잉인가 자유주의 결핍인가」, 『아시아연구』 제51권 4호, 2008, 148~181쪽
- 손현주, 「코로나19와 정치의 미래」, 『지역사회연구』 제29권 2호, 2021, 120~123쪽.
- 윤정현, 「초국가적 난제 시대의 초국가적 거버넌스」, 『국제문제연구소 워킹페이퍼』 166호, 2020.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2010.
- 최태욱,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서울: 책세상, 2014.
- Bolton, John R., 김동교 외 역, 『그 일이 일어난 방: 존 볼턴의 백악관 회고록』, 서울: 시사저널사, 2020.
- Huntington, Samuel 저, 강문구·이재영 역, 『제3의 물결: 20세기 후반의 민주화』, 서울: 인간사랑, 2011.
- McIntyre, Lee 저, 김재경 역, 『포스트 트루스』, 서울: 두리반, 2019.
- Nye, Joseph S. Jr., "American and Chinese Power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3, No. 4(2010).
- Oberdorfer, Do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Y.: Basic Books, 2001.
- Ruggie, John G. Ruggie, ed.,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일반논문

---

남북 문학사의 소통과 '통일/문학'이란 개념

- 북한 『조선문학』, 『문학신문』(1945~67)의 기사 제목 분석을 중심으로 • 김성수





---

# 남북 문학사의 소통과 ‘통일/문학’이란 개념

## - 북한 『조선문학』, 『문학신문』(1945~67)의 기사 제목 분석을 중심으로

●  
김성수

성균관대 학부대학 글쓰기교수

### 국문 초록

8.15 이후 70년동안 남북 코리아의 학자, 비평가들은 수십 종의 문학사를 기술하면서 분단된 자기 문학사(문)만 정전으로 공고히 하면서 상대를 타자화, 공동화시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사’를 서술하는 포용적 시각으로 한반도 통합 문학사 서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1945년까지 원래 하나였던 2천년 역사의 ‘우리문학사’를 남북으로 분단 서술하는 전례를 비판하고, 남북 문학의 상호 소통 및 교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령 남북 지역 균등론이나 사실주의(리얼리즘) 미학 등의 공통향을 찾아 남북 코리아 문학사를 통합 서술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남북 코리아 문학은 배타적 자기중심주의를 넘어서, 탈식민적 근대성을 지닌 현대문학이면서 동시에 ‘코리아반도 문학의 부분’인 지역·지방문학으로 새롭게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 코리아가 정치·이념상 이유로 정전·문학사·문학교육에서 배제한 문학적 실체를 복원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 문예지 『조선문학』, 『문학신문』(1953~67)의 기사 제목 중 ‘남북한 작가의 상호인식과 통일/문학 담론’의 역사적 변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일’이란 개념어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로 연관되어 남북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체제 내부의 노동력 동원이나 대남 비판, 대외 선전이라는 4가지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남)한국이 배제했던 재월북 작가와 (북)조선이 지워버린 숙청 작가를 포용하여 분단/냉전체제로 강박된 기존 문학사에서 배제, 누락된 문학적 실체를 복원하여 한반도 통합 문학사 서술을 준비해야 한다.

---

•핵심주제어 : 문학사, 통일문학, 분단문학, 한국문학사, 북한(조선)문학사, 우리문학사, 『새민족문학사강좌』(2009), 『조선문학사』(전 15권, 1991~2000), 『조선문학』, 『문학신문』

## I. 문제제기: 왜 남북 소통의 문학사인가

문학연구가 그 자체의 학문적 체계와 내재적 논리를 갖추지 못하고 정세 변화와 시류에 지나치게 영향 받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1988년의 남·월 북작가 해금조치 이후 30년 넘게 (한)국문학을 전공한 필자가 주력한 ‘북한문학-남북문학-통일문학’ 연구사를 돌이켜보면 회한이 든다. 1988년의 남·월 북작가 해금조치나 2000년의 6.15공동선언, 2018년의 남북, 북미정상회담 때처럼 남북 화해무드가 될 때는 학계, 독자의 관심을 끌다가 2008년 이후 북핵 위기와 2022년 보수 정권 집권기처럼 남북 간 적대국면이 되면 관심 대상에서 멀어지는 현상을 반복해왔다. 평상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다 논의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학문적 쟁점이 되고 사회적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와 학문시장의 요구에 따라 작위적으로 논의가 종속되었던 셈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1994년의 남북합의서 이전으로 퇴행한 ‘신냉전기’에 접어들었다. 2012년 출범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나 2022년 집권한 윤석열 정부 사이의 대화 창구는 단절되었다. 지금처럼 북한학, 북한문학연구의 위기의식이 극심할 때는 새로운 논의가 쉽지 않다. 북한·통일문학이나 문학적 통합 관련 논의가 정세 변화에 민감했던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합 문학사인가?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그때 가서 연구 프로젝트 지원금을 받아 문학사 통합 서술방안을 정책보고서처럼 쓰는 게 아니라, 남북 관계가 최악이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지금 같은 위기의 시기에 역설적으로 비정치 영역인 문화적 소통방안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후일을 도모하자는 역발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45년 이후 한반도 문학을 얘기할 때, 남한과 북한이 상대방의 작품과



작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학사적 유산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외연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부실해진다. 왜 우리 학자, 비평가들은 전 지구적 시각에서 세계 각국의 ‘한민족 공동체의 디아스포라(Diaspora) 문학사’까지 연구하면서 정작 북한 문학 연구에 소홀히 하는가? 사실 학자들이 어렵게 북한 문학 작품을 구해서 읽고 연구한 후 그 성과를 작품집과 교재로 유통시키려 해도 국가보안법이라는 틈에 놓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자들은 굳이 고생을 감수해가며 북한 문학을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문학사(서술) 자체가 예술에 억지로 위계질서를 부여하려는 일종의 권력담론의 산물이니 애써 서술할 필요가 없다는 포스트담론, 해체주의가 학문시장의 주류가 된 마당에 더욱 그렇다.

1945년 이래 70년 동안의 분단체제 아래 그나마 남북 간의 화해 무드(2000~2007, 2018~19)일 때 문화 분야의 상호 이해와 교류 협력은 대체로 서로의 이질성을 애써 외면한 채 공통항을 과대평가하여 대화를 진행하였다. 반대로 남북관계가 악화(2008~)되면서 서로 너무나 다르기에 아예 상호 이해와 인정 차원부터 벽을 되 쌓고 체제 우월 경쟁구도만 강조해왔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점을 적시하고 상호 인정해야 비로소 어떻게 거리를 좁히고 함께 현안을 해결할지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류 협력을 되살릴 수 있을 터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의 당대문학’은 언젠가는 재통합될 우리 근현대문학사의 하위범주로 재규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문학/조선문학’의 공존을 인정해야 그 기반 위에서 ‘남측문학/북측문학’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늘려나가는 단계가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의 이남 이북 지역 문학을 하나로 보고 ‘이남 이북의 지역문학’이 동거-연방-연합함으로써 통일/통합으로 진화하는 단계를 그려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현재의 남북도 한반도 반만년 역사의 거시적 시각에서 볼 때 서기 668년 삼국 통일로 신라(발해와의 남북조 서술도 가능)와 고

려, 조선 등 1300년 동안 단일 국가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sup> 그러다가 1945년 해방과 함께 남북이 분단되었기에 1948~?(통일년도) 시기는 별개 국가로 분단되었다가 다시 통합된 때라고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금의 분단 시기는 한국이나 조선이 아니라 남한국 북조선의 남북국시대로 보거나 아니면 가상 미래의 국가연합/연방국가 내의 남북 지역/지방으로 상상적 위상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남북문학은 그 자체로 근대문학이며 코리아반도 문학의 일부인 지역문학, 지방문학으로 볼 수 있다.<sup>2</sup> 이렇게 상상해야 그 다음에 연방국가 내의 남북 지역 문학사를 통합해서 서술할 공통 기반이 생긴다.

다만 기존의 남북 코리아의 소통 및 언젠가 서술해야 할 가칭 통합 코리아 문학사 서술 방안 모색은 자칫하면 현실성이 없는 허상일 수 있다. 이에 소통과 통합의 비현실성, 추상성의 한계를 지양하기 위하여 문예지란 구체적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역대 기사 제목에 나타난 소통과 통합의 개념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월남, 월북 작가들이 생존해 있었기에 일방적이거나 공식적인 대화 제의가 오고 갔거나 물밑 접촉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던 1950,60년대를 남북 소통의 물리적 가능시간대로 설정하여, 당시 북한의 대표 문예미디어인 월간 『조선문학』과 주간 『문학신문』의 기사 제목에 나타난 ‘통일/문학’ 개념을 검토한다. 이는 후일의 공식 문학사에서 배제된 작가와 문학까지 그 당시의 실체를 복원하려는 의도와도 관련된다. 오늘날의 공식 문학사인 『조선문학사』에는 누락, 배제되었지만 당시 문예지에는 등장했던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통일’이란 키워드로 재구성하려 한다. 문학사적 소통의 명분으로 복원할 대상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숙청된 이남의 월북 작가와 이북의 숙청 작

1 북한 역사학계는 삼국 통일 시대를 발해와의 남북국 시대로 보고 통일 신라를 인정하지 않은 채 ‘후기 신라’라 명명한다.

2 김성수, 「북한 현대문학 연구의 쟁점과 통일문학의 도정」, 『어문학』 91호 (2006) 참조.

가, 사회주의 리얼리스트, 그리고 통일/민족 담론이 될 것이다.

왜 1945~67년인가? 바로 '주체사상의 유일체제화' 이후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만 추종하지 않고 한반도적 시각으로 지워진 문학예술의 역사를 복원할 시기가 이때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남북에서 월남, 월북한 작가들이 아직 활발하게 문학활동을 펼쳤던 때였다. 따라서 분단에 기인한 월남·월북·재북 작가 예술가의 행적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여 그들의 문학을 실사구시로 복원·복권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학의 입장이란 유일사상 체제화(1967~)된 주체문예론('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체계')과 수령론 및 선군사상 탓에 상당 부분 지워진 비(非)주사 사회주의 문학 역시 복원·복권하자는 의미이다.

## II. 『조선문학』 『문학신문』(1945~67) 기사 제목의 '통일/문학' 분석

필자는 한반도에 강고하게 뿌리내린 분단과 냉전체제가 균열되고 평화체제 및 연방, 통합, 통일로의 기나긴 여정이 2000년의 6.15공동선언으로 중요한 이정표를 찍었다고 본다. 분단을 넘어서 평화통일로의 도정이 6.15공동선언에서 정치적으로 구체화되었다면, 문학사적으로는 겨레말큰사업 공동편찬사업(2004), 민족작가대회(2005), 6.15민족문학인협회(2006) 등으로 남북 문학의 소통과 통합 노력이 실제로 드러났다고 판단한다.

평양에서 열린 민족작가대회(2005)와 남북 작가의 단일 조직인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2006)과 기관지인 『통일문학』 간행(2008),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2004~) 등을 근거로 남북 문학의 교류와 협력, 나아가 통일문학(사)의 길을 낙관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 남북 문학·언어의 단순한 교류 차원을 넘어서 공존과 동거 다음 단계인 통합 프로세스를 제안하기까지 한 바 있다.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한국 학자의 '북한문학' 연구가, '남북문

학/통일문학' 연구로 내포와 외연을 심화, 확대할 시점이라 제창한 바 있다. 남북 지역 문학의 통합도 '정책, 조직, 언어의 통일'이라는 제1단계와 '사상, 이념, 정서의 통합'이라는 제2단계를 구분하되 중간 세부 단계는 그때그때의 역동적 상황에 맞춰 대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sup>3</sup> 거시적인 문화통합프로세스를 준비하면, 남북의 기왕의 반쪽짜리 문학사를 단순 병렬 병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호상승식(win-win) 통합전략에 따라 유기적 화학적 통합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sup>4</sup>

하지만 2000년 이후 통일문학론을 제창한 후 2016년을 변곡점으로 현재까지 한반도 통합 문학사 구상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sup>5</sup> 기실 '한반도 통합 문학사 구상'이란 주제가 너무 거창하여 실질적인 내용이 부실하기 쉽다. 짧은 논문 안에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포용하는 데 어떻게 실제 사례를 선정해서 분석할지 문제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의 궁극적인 함의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자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글의 입론은 남북 학계의 자국중심주의적 산물인 분단 문학사 전체 하의 공식 입장인 '한국문학=조선문학=주체문학' 같은 일방적 규정 대신, 코리아반도(한반도/조선반도)적 시각과 리얼리즘 미학의 입장에서 남북 문학을

3 위의 글 ; 김성수, 「문학적 통이(通興)와 문학사적 통합」, 『한국근대문학연구』 19집 (2009) 참조.

4 필자의 통합 문학사론은, 축구나 탁구 단일팀처럼 상호상승식(win-win) 통합전략으로 민족문학과 리얼리즘의 대의에 따라 문학사의 어느 시기에는 북측 성과를 강조하고 어느 국면에선 남측 성과를 부각시키면서 화학적 통합 서술로 남북문학사를 통합해서 쓰자는 제안이다.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서울: 책세상, 2001) 서장 참조. 다만 문학사 통합이나 통일 문학사 서술이란 아래로부터의 문학적 소통의 최종심급인가, 아니면 위로부터의 정치적 통일과 문화적 통합의 연장인가 하는 점부터 문제가 되니 어렵다.

5 “갈 길은 먼데 해는 벌써 저물고 동행인도 한 사람 없으니 자기비판조차 허공에 머무는데...” 이러한 감상적 고백이 기실 통일문학론 제창자의 자기비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김성수, 「통일 담론과 남북 문학사 소통방안」, 『민족문학사연구』 56호 (2014). 이에 대하여 이영미는 북한문학 학계 동향을 검토하는 논문에서 통일문학사를 쓰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의 근거로 포착했는데, 2018년의 줄고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영미, 「남북한 통일문학사 기술의 과제와 전망」, 『한중인문학연구』 제50호 (2016); 김성수, 「'코리아문학'의 통일·통합(불)가능성 : 남북 문학 교류의 역사와 과제」, 『통일과 평화』 10집 2호 (2018) 참조.

실사구시적, 역사주의적으로 다시 보겠다는 것이다. 가령 이남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빨갱이 또는 월북 작가라 경원시했고 이북에서 부르주아 반동과 월남 작가, 순수문학·자연주의 등 부르주아미학사상 잔재로 매도·배제·숙청했던 일군의 작가와 그들의 영혼이 담긴 작품들의 복원 복권 문제이다. 이를 위해 실종 배제 작가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들의 작품목록을 정리하여 작가의 복권과 문학의 복원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남북 문학사의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남북 문학 간의 소통과 교류, 통합을 위한 실체적 노력을 문예지 기사 제목의 개념어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는 개념사적 접근법의 하나인 롤프 라이하르트의 어휘통계학을 원용하여 귀납적으로 역사적 의미론을 추출하는 것이다.<sup>6</sup> 오랫동안 북한 문예지 미디어콘텐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온 필자가 영감을 얻은 양적 개념사 연구성과로는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개념사 연구,<sup>7</sup>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등 전산화된 근대 언론 매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념사 연구<sup>8</sup>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동아일보』와 북한의 『로동신문』(1987~89)에 수록된 미디어콘텐츠의 기사 제목 중에 ‘민족문학’ 개념을 분석한 이지순의 선행 연구<sup>9</sup>를 선편 삼

6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고양: 역사비평사, 2011); Rolf Reinhardt 저, 최용찬 역, 『역사적 의미론: 어휘통계학과 신문화사 사이』,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서울: 소화, 2015, 개정증보판) 참조.

7 신중화, 「‘모던(modern)’의 한국적 개념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근대에 관한 『조선왕조실록』의 언어적 용례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7호 (2013); 유승무·박수호·신중화, 「‘마음’의 사회학적 재발견과 ‘합심(合心)’의 소통행위론적 이해: 『조선왕조실록』의 용례 분석에 근거하여」, 『사회사상과 문화』 28호 (2013); 이경구, 「개념사와 내재적 발전: ‘실학’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13호 (2013).

8 허수, 「어휘 연결망을 통해 본 ‘제국’의 의미: ‘제국주의’와 ‘제국’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7호 (2014); 노관범, 「대한제국기 진보 개념의 역사적 이해: 언론 매체의 용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 56호(2011); 김제정, 「근대 ‘경성京城’의 용례와 그 의미의 변화」, 『서울학연구』 49호 (2012); 김영희·윤상길·최운호, 「대한매일신보 국문 논설의 언론 관련 개념 분석: 대한매일신보 논설, 코퍼스 활용 사례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2호 (2011); 김영희, 「『독립신문』의 지시 개념과 그 의미」, 『한국언론학보』 57권 3호 (2013) 등 참조.

9 이지순, 「‘민족문학’ 개념의 남북한 상호 영향관계 연구: 『동아일보』 『로동신문』의 1987-89년 용례를

아 북한 문예지 기사 제목의 '통일/문학' 개념어를 분석하기로 한다.

그를 위해 『조선문학』 『문학신문』(1945~67)에 수록된 기사 제목 중에 '통일/문학' 개념이 얼마나 등장하며 그 함의는 무엇인지 분석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왜 '통일/문학' 담론의 시계열적 분석<sup>10</sup>인가? 북한 문예지 『조선문학』 『문학신문』의 '통일/문학' 담론을 전체 기사 제목의 키워드 추출과 의미 분석을 시도하여 패턴을 찾아보고자 한다.<sup>11</sup> 통일/통합/소통/대화/교류/협력의 거론 횟수, 관련 개념인 민족, 동포, 통일/문학이나 교류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각 항목 간의 관계 비율을 산출하여 앞으로 다가올 남북 통합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개념사 방법론적으로 볼 때 '통일'이란 공기어와 연관된 언어는 '통합, 소통, 대화'이며 행위 주체는 '민족, 동포, 겨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일문학' 또는 '문학적 통합'이란 어휘, 개념은 1945~67년 북한 문예미디어 자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가령 필자가 30년간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한 『문학신문』(1956~67) 기사 제목 수만 건 중 '민족문학, 민족주의문학'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각각 민족문화 4회(민족문화유산=문화재 지칭), 민족음악 2회(민속음악 지칭), 민족미술 1회, 민족무용 2회(민속무용 지칭) 등이 보일 뿐이다.

북한 대표 문예지 『조선문학』의 전신은 1946년 창간된 『문화전선』이다.

---

중심으로», 김성수 외 공저,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2』(서울: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 10 여기서 시계열 분석(時系列分析 analysis of time series)이란 어떤 대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동을 관측하여 얻어진 자료에 의거하여 그 변동의 원인을 해명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으로, 과거 자료를 알면 미래가 예측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기초하고 있다. 과거 남북한 문학 매체의 '통일/민족'의 담론 추세나 대화/소통의 제안 또는 통합 노력을 모형화시키기 위해 수학적 기법과 역사적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 11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줄고가 '표제어'의 시계열적 분석과 계량 분석 방법론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기에 '표제어'의 적합한 사용과 '계량분석'을 제시하라고 지적한 데 동의한다. 다만 북한 문예지 자료 전체를 수집하지 못해 계량 분석의 기본인 데이터가 태부족한 점과 사회과학의 양적 분석법이 아닌 인문학의 질적 접근법이 조금 다르다고 해명한다. 표제어는 지적한 대로 '기사 제목'으로 수정하였다.

이듬해까지 총 5호가 나온 『문화전선』이나 후속 문예지인 『조선문학(朝鮮文學)』 2호의 기사 제목에는 통일/통일문학 담론이 보이지 않고, 리청원, 「조선민족문화(朝鮮民族文化)에 대하여」(1946.11), 윤세평, 「신민족문화 수립(新民族文化樹立)을 위하여」(1947.4), 최승일, 「조선민족고전연극론(朝鮮民族古典演劇論)」(1946.11), 안막, 「민족예술(民族藝術)과 민족문학 건설(民族文學建設)의 고상(高尚)한 수준을 위하여」(1947.8) 등에서 '민족'만 보인다. 이는 해방기 북한이 아직 사회주의체제로 안착되기 이전 인민민주주의체제 하라서 계급문화, 계급문학보다 민족문화, 민족문학을 담론화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북한의 담론장이나 문학예술장에서 '통일'보다는 '국토완정'이라는 이북 중심의 흡수통일론적 담론이 대세라서 그런지 통일을 굳이 앞에 내세워 쟁점화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1948년 창간된 『문학예술』의 6년치 기사 제목만 일별해도 마찬가지이다. 1949년 7호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강령'이 게재되긴 하지만 문학 담론이기보다는 비문학 당 정책 문건의 기관지 게재의 일환일 뿐이다.

1949년 당시 북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가령 강승한 시, 「수양(首陽) 산상(山上)에서」에 나오는 '평화 통일'로 대변된다. 4.3항쟁을 그린 서사시 『한나산』로 유명한 시인은 해방기 북한 문예지 『문학예술』에서 '통일'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바람도 구름도 / 산정을 넘나들며 / 치솟는 격불에 / 몸부림치는 곳 //  
 손에 잡힐 듯 / 푸른 바다 건너 / 삼팔선 저편 / 공화국의 산들아 //  
 이 아침도 / 봉오리 봉오리 / 어느 결전의 마당에 / 승리의 하루를 지키어 / 우렁찬  
 인민의 미래를 고하는 / 항쟁의 기쁨을 / 기쁨을 그 품에 안아주는 / 산아 조국의  
 산아 //  
 동족의 피를 물고 날뛰는 / 망국 괴뢰의 발자국이 어지러워도 / 돌 한조각 풀 한포  
 기…… / 너의 품안 물 한줄기도 / 원수의 노락질을 눈감지 않는 / 너는 조국의 원



쭉 잊지 않노니 //  
 미 제국주의 야수의 / 흉계 음모 깡그리 썩어 문허판치고 / 완전 자주통일 어엿이  
 틀어질 //  
 새힘의 핏줄이 구비드는 / 산아 남반부의 산들아 / 잊지 말자 약속하자 / 최후의  
 승리를! / 증오할 원수를! //  
 이제 머지 않아 / 뜨거운 사랑과 그리움으로 / 우리 서로 부여안고 낮을 부빌 / 국  
 토완정의 그날을 위하여<sup>12</sup>

서정적 자아는 고려 도읍지였던 개성 인근 수양산에 올라 삼팔선 남녘을  
 바라보고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통일된 조국을 완정할 결심을 다지고 있다. 이  
 시에서 통일 담론은 ‘완전 자주통일’ ‘국토완정’이란 두 단어로 요약된다. 당  
 시 우리 대한민국=남한의 통일 관련 지배담론이 ‘북진통일’이라는 구호적 차  
 원, 구체적 실현능력이 부재한 외침에 머물렀을 때, 북한(‘공화국’으로 자칭)  
 문학의 담지자는 ‘완전 자주통일’ ‘국토완정’이라는 주도면밀한 개념어로 통  
 일을 구체화한다. ‘완전 자주통일’ ‘국토완정’의 반대 개념은 ‘불완전/외세의  
 존적/분열’, ‘국토 분단’이 될 터이다. 위의 시에서는 이를 두고 ‘미 제국주의  
 야수의/흉계 음모’이며 ‘망국 괴뢰의 발자국’으로 형상화한다. 그렇다면 시인  
 에게 통일의 구체적 실현은 외세 배격과 허수아비 정권의 축출로 상정되었다  
 는 뜻이며, 이는 통일에 대한 초기 북한의 지배이념이었을 터이다.

1953년 10월 ‘루계 74호’로 창간된 『조선문학』지 1967년 12월호 145호  
 까지의 기사 제목에서 ‘통일’이 들어간 문건은 17건 정도이다. 1956년 12월  
 창간된 4면짜리 주간신문 『문학신문』 1호부터 1967년 12월 말 1035호까지  
 기사 제목에 ‘통일’이 담긴 문건의 시계열적 추이를 보면 1956년 12월부터  
 1960년 4월까지 대략 24건 정도밖에 없었던 통일이란 개념어가 담긴 제목이

12 강승한, 「수양(首陽) 산상(山上)에서」, 『문학예술』 1949.5, 80쪽.



4.19 이후 매년 2,30개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1966,7년만 해도 34건이 발견된다(조국 통일처럼 남북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 통일처럼 내부 통합을 의미하는 개념어는 제외하였다).

통일문학이란 개념어는 아예 없지만 ‘조국 통일의 주제’ ‘조국통일주제’는 자주 나온다. 월북 작가 리복명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우리 문학」(평론, 『조선문학』 1956.10)에서 보듯이, 통일의 방식은 남진통일(남한의 ‘북진통일’에 대한 대응어)이나 무력통일, 적화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다. 1959년 11월호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란 기획 주제로 월북 시인인 조벽암 시 「원한의 폐말」, 소설가 박승극 수필 「송악산 마루에서」, 김희도 정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극작가 한성의 수필, 「증오」 등이 실린다. 이는 전후 복구 건설의 성공으로 남한보다 우위에 서있는 사회주의적 국가 경쟁력의 자신감을 가지고 군사모험주의적인 전쟁 재현보다는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한 단계적 통일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초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다 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라 풀이할 수 있다.

원래 북한의 사회주의적 문예노선에서 ‘조국통일주제’는 ‘사회주의 건설주제’ ‘전후복구건설주제’ ‘항일혁명주제’ ‘수령형상주제’처럼 작가 예술인들에게 당 문예정책으로 이미 정해진 창작과제이자 작품 주제이며 소재이기도 하다. 즉 “작가들이여 창작의 붓을 조국 통일 주제에로!”란 『문학신문』 1958년 1월 16일치 3쪽의 머리기사 구호처럼 북한 작가 예술인들에게 통일은 마치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해내듯이 일상적인 창작의 당면 과제이며 주된 소재/주제이기도 하다.<sup>13</sup>

그렇다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구체적 방도는 무엇인가? 여기서 ‘조국’ 통일은 ‘국토 완성’이란 정치·군사적 사회과학 개념어가 주는 딱딱함을

13 서만일, 「작가들이여 창작의 붓을 조국 통일 주제에로(구호)\_ 김돌이 되려는 심정으로」, 『문학신문』 1958.1.16, 3쪽.

보완하는 감성적이면서 민족 정서에 호소하는 인민성의 개념이다. 한편으로 는 어머니 조국을 훼손하는 남한 ‘괴뢰정권’과 미제 등 ‘원수에 대한 증오’로 전화되기 쉬운 정서적 환기를 촉발하는 개념어이기도 하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염원은 원래 남북의 하나된 정서를 회복하는 것이지만 북한체제 내부적으로는 한편으로 북한 체제 내부의 사회주의적 건설을 위한 생산력 제고의 빌미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에 대한 평화란 이름의 흡수통일을 외치기 위한 파쇼정권 축출과 미군 철수 등 ‘원수에 대한 증오’로 현현된다. 나아가 세계 각국의 외교 무대에서 평화 통일이란 국제적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담론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선문학』 『문학신문』의 ‘통일/문학’ 담론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면 대략 네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염원은 원래 남북의 하나된 정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한 작품으로는 박팔양 시, 「조국 통일」(『조선문학』 1960.8), 송찬웅 시, 「울려라 통일의 북소리」(『조선문학』 1961.1), 강립석 시, 「통일의 서사시를」(『문학신문』 1960.12.02.), 박산운 가사, 「통일 열차 달린다」(『문학신문』 1960.12.23.) 등이 있다. 직접적으로 감성적 통일을 호소하진 않지만 남북 국토를 기행함으로써 조국 강산에 대한 민족 정서에 호소하는 월북 작가 리갑기의 연재 기행 수필 「조국 강산과 역사」도<sup>14</sup> 눈에 띈다. 북한의 압록강, 백두산부터 시작하여 ‘림진강’(제6회), ‘제주도와 한나산’(제7회)까지 국토 종단 기행을 연재함으로써 통일에의 염원을 시공간적 정서로 전화시키는 것이 인상적이다.

둘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염원을 사회주의적 건설을 위한 생산력 제고의 동력으로 삼은 것도 특기할 만하다. 차용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자」를 보면 조국 통일을 위하여 평화적 통일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

14 리갑기, 「조국 강산과 역사」, 『조선문학』 1965.1호~7호(7회 연재).

려면 화학비료 53만톤 생산계획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초과하는 노동에 자발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다.<sup>15</sup> 통일에의 주관적 의지를 생산에의 자발적 노동 동원이란 객관적 물질 기반으로 전화하는 좋은 예라 하겠다. 이러한 상징기제는 북한 문학예술이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해야 할 뿐 아니라 남한 해방과 조국 통일을 위한 인민의 투쟁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지도자의 교시<sup>16</sup>나, 윤기백의 선전화인 〈조국 통일 념원 안고 나라에 더 많은 쌀을!〉,<sup>17</sup> 김명수 평론,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의 주제」<sup>18</sup> 등에도 일관되게 작동되고 있다.

셋째, ‘조국 통일의 주제’ 중 통일 염원의 소구점으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통일을 가로 막는 남한 정권과 미군 등 ‘원수에 대한 증오’이다. 가령 리현순의 작가 연단 글인, 「조국 통일에 대한 념원, 원수에 대한 증오의 빠포쓰로」나 6.25전쟁 9주년 기획기사로 실린 리응태의 시, 「통일의 날은 멀지 않았다」는 둘 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는 안타고니스트(반동적 캐릭터)로 남조선 괴뢰와 미군, 미제를 두고 그들의 부패 타락 만행상을 극대화하고 독자인 북한 인민대중의 투쟁심을 고취하고 있다.<sup>19</sup>

‘조국 통일의 주제’ 중 가장 많은 내용이 이러한 방식의 대남 대미 비난과 그를 통한 대내적 단합이다. 가령 『문학신문』 1958년 2월 13일자 1쪽에 전면 편집된 기획물 ‘평화적 조국 통일을 방해하는 미군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제하 특집을 보면 김동진 문학신문 기자의 머리기사 「작가들은 웨친다, 미군

15 차용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자」, 『문학신문』 1960.11.29., 1쪽.

16 김일성, 「우리의 문학예술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해야 할 뿐 아니라 남조선의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복무하여야 한다」, 『문학신문』 1967.11.7., 1쪽.

17 윤기백, 「조국 통일 념원 안고 나라에 더 많은 쌀을!」, 『문학신문』 1967.8.18.

18 김명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의 주제」, 『문학신문』 1967.9.12., 3쪽.

19 리현순, 「조국 통일에 대한 념원, 원수에 대한 증오의 빠포쓰로」, 『문학신문』 1959.7.14., 2쪽; 리응태, 「통일의 날은 멀지 않았다」, 『문학신문』 1959.6.25, 3쪽.

은 물러가라.」를 비롯하여, 평론가 윤세평의 정론 「민족의 분렬을 더는 지연 시킬 수 없다」, 극작가 탁진의 정론, 「미제 침략군은 나가라」, 필자 미상의 기사 「간절한 녀원 견결한 투지」까지 일관되게 통일과 반통일을 대비시켜 구호성의 정치적 비난일변도 글을 특집으로 게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967년 7월 7일 4쪽의 특집 시 기획물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보면 허우연의 「무엇때문에 잠들지 못하는가」, 박팔양의 「번지며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흉악한 원수들은 재가 되리라」, 조빈의 「정의로운 항쟁의 길에서」, 최로사의 「파쑈의 아성을 짓부셔가자」는 선동선전시가 나란히 편집되어 있다.<sup>20</sup>

넷째, 세계 각국의 저명인사로부터 평화 통일 지지를 이끌어내는 외교적 언술이다. 가령 『문학신문』 1958년치를 보면 북한의 평화 통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문화예술인 명의의 공개서한 형식으로 릴레이 게재하고 있다.

웨. 씨핀(소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녀원하는 조선 작가들의 투쟁을 지지 - 박팔양 서만일 동지 앞(공개서한)」, 1958.4.17, 3쪽.

라메쉬와리 네루(아세아-아프리카 단결 인도 위원회 위원장),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여 (친애하는 한설야 선생, 1958년 4월 12일 뉴델리에서)」, 1958.5.8., 1쪽.

미상, 「조국 통일 문제는 조독 량국 문학의 중요 쟁마」, 1958.5.15., 1쪽. (사진

20 이밖에 구호, 사진, 그림, 악보 등 비문자 텍스트도 이러한 주제를 다룬 문건이 『문학신문』에 적잖이 게재된다. 가령 1967년치를 훑어보면, 「조선은 조선 인민의 것,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사진 전람회 <조국통일을 위하여>가 열렸다」(보도기사, 3.14, 3쪽), 립찬영,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합성사진, 4.23, 3쪽), <전 민족이 단결하여 미제 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조선 인민의 자주적인 힘으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나서라>(상자 구호, 6.16, 1쪽), <미제를 소멸하고 조국을 통일할 불패의 위력을 과시-조선인민군 종합군사경기대회에서>(상자 구호, 6.20, 2쪽), 조호진, 립위수, <조국 통일의 대사변을 준비 있게 맞이하자>(선전화, 6.23, 4쪽), 김창일,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합성사진, 6.27, 1쪽), 유헌기,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포스타, 7.11, 4쪽)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신문의 편집 특성상 문자 텍스트와 비문자 텍스트가 어울려 독자들을 더욱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격동하게 만드는 선전장치라고 하겠다.

‘한설야 위원장을 방문하여 담화하는 볼리프강 요호’)

느구예 쉰안 썬브(월남),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지지- 친애하는 송영 선생 앞(하노이에서)」, 1958.7.3., 1쪽.

쓰. 므. 쉬(인도네시아미술협회 비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지지-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앞(자카르타에서)」, 1958.7.17, 1쪽.

느구예 쉰안 썬브, 「평화적 조국 통일을 지지하여 -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앞(월남 하노이에서)」, 1958.8.14, 1쪽.

김주명(본사 기자), 「조선에 평화와 통일을! - 조선평화옹호전국대회 진행」, 1959.6.21, 1쪽.

박웅걸, 「조국의 평화 통일 한길로」, 1960.1.1., 4쪽. (귀국 재일동포 환영 기사)

이들 통일 관련 공개서한 등 문예매체의 게재 문건에서 주목할 사실은 대내용인 ‘조국’보다는 대외용인 ‘평화’에 방점이 찍혀진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조국 평화 통일 노력에 대한 민족적인 명분 확보와 국제적 지지 및 북진통일만 고집했던 남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외교적 고립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북한의 대표적인 문예매체인 『조선문학』 『문학신문』(1945~67)에 실린 ‘통일/문학’ 기사 제목의 개념사적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란 담론에 담긴 통일에 대한 염원이 내부용으로는 노동 동원에 활용되고 대외용으로는 남한과 미국에 대한 증오 및 국제사회에 평화 전도사를 자처하는 다각도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문예지의 ‘통일/문학’ 담론이 가장 활성화된 것은 4.19 이후 남한과의 소통과 대화를 시도했던 시기였다. 가령 월북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송영이 4.19혁명 1주년을 기념하여 『문학신문』에 기고한 「민족문화를 통일적으로 꽃피우자」(1961.5.16.)를 보면 표면적으로 ‘민족문화 통일’이란 미사여구를 내세우지만 실제 내용은 미군의 즉각 철수와 자주 통일을 말하고 있다. 부

때 타락한 남한과 행복한 낙원 북한의 이분법이 전제된 결론이기에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기엔 진정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sup>21</sup>

문학작품에 나타난 ‘통일’이란 시어가 4.19로 촉발된 남북 관계에서 실제로 어떤 정서적 심미적 정치적 이념적 기능을 했는지 박팔양의 4.19 소재 시 「불길」을 살펴보자. 시에서 통일이란 단어를 찾아보니 “타라, 번지라, 불길이여./ 온갖 불의와 횡포를 살라 버리라./ 온갖 추악한 패륜을 살라 버리라./ 통일의 새날이 닥쳐온다.”<sup>22</sup>고 노래한다. 하지만 ‘통일의 새날’은 악의 땅인 남한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소멸로만 가능하다고 주창한다. 반독재 투쟁이 처음 막을 올린 3.15부정선거 폭로의 시발지인 마산은 “굶주림과 혈벗음이 널려 있고/ 모든 생명이 메마른” 곳이며, 「인민의 권리도 자유도 없고/ 화약 냄새만 풍기는」 악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그런 “죄악의 남녘 땅 짓밟힌 땅”이기에, 「온갖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억누르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불길로 태워버리라고 일갈한다.

시는 남한 타락상에 대한 증오로 가득한 이분법적 규정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땅’을 다 태워버려야 ‘통일’이 온다고 외치는 극단적 감정 과잉을 보인다. 불길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산시켜 이승만 독재에 맞선 남한 민중까지, 그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까지 다 태워버릴 기세이니만큼 증오의 선동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의 새날’이란 표현이 그 어떤 내적 필연성이나 민족적 공감을 진정 염원한 결과보다는 조금은 뜬금없게 느껴진다.

북한의 4.19 주제 작품 중 가장 눈에 띄는 리효운 장시(長詩) 「혁명의 서곡」(1960.4.29.)의 한 대목에서 통일은 평화 통일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21 송영, 「민족문화를 통일적으로 꽃피우자」, 『문학신문』 1961.5.16, 1쪽.

22 박팔양, 「불길」, 『문학신문』, 1960.4.19, 3쪽.

영웅 서울 시민이여! 1960년은 왔다! / 이 젊어 푸르른 힘과 / 이 붉은 심장의 피  
를 주매 // 평화 통일에 대한 민족의 갈망 안고 / 생존과 권리, 정의와 민주주의 위  
하여 / 불덩어리로 결사전에 나선/ 당신들을 뜨겁게 포옹하며/ 승리를 축복할 날  
이 오고 있다<sup>23</sup>

‘1960년에 나온 4.19 소재 시’를 개괄하면, 이승만 정권의 ‘파쇼테로통치’  
에 맞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민주화 담론과 ‘미제의 폭압 통치’에 맞선 자주  
화 담론, 그리고 미군 철수와 미제 배격 등 반외세 담론 및 통일 담론이 지배  
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표리부동한 계층적 우열관계가 엄  
존함을 간과할 수 없다. “평화 통일에 대한 민족의 갈망 안고/ 생존과 권리, 정  
의와 민주주의 위하여”에서 보듯이 ‘자유, 민주주의, 평화 통일’ 등의 담론은  
실상 표면적 주제일 뿐이다. 이면에 존재하는 미군 철수와 미제 배격 등 반외  
세 담론 및 궁극적인 통일 담론이 더욱 중요한 숨은 주제 내지 진정한 의도임  
을 외면할 수 없다. 결국 통일을 위해 “영웅 서울과 온 남녘 땅 인민들 단결하  
라!”면서 “리승만, 파쇼 테로 통치를/ 뿌리채 뽑아내라, 뒤집어 엎으라!”고 선  
동하는 ‘반정부, 반미’ 선동어구로 시적 결구를 맺기 때문이다.<sup>24</sup>

이들 문예지 기사 제목의 ‘민족/통일/문학’의 변모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통일 담론이 가장 활성화된 것은 1960년의 ‘4.19혁명’ 이후 남한에 대한  
대화라는 화해적 제스처를 취했던 4.5년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4.19 이후의 문예지 통일 담론조차 남한 출신 월북 작가들의 존재증명과  
외세 배격을 통한 자주적 통일의 미명 하에 북한으로의 흡수통일을 전제한 것  
이 아닌가 조심스레 추정해 본다.<sup>25</sup>

23 리효운, 「혁명의 서곡」, 『문학신문』 1960.4.29., 4쪽.

24 이상 세 문단은 김성수, 「4.19와 1960년대 북한문학- 선동과 소통 사이: 북한 작가의 4·19 담론과  
전유방식 비판」, 『한국근대문학연구』 30호 (2014)의 해당부분 요약과 참조이다.

25 위의 글, 30, 35쪽.

### III. 결론: 뽀셈의 문학사에서 덧셈의 문학사로

한반도 남북의 분단 문학사를 서술할 때 한쪽 편의 정통론만 고집하면 분단 고착화에 빠져버린다. 체제 대결과 전면전의 나락으로 떨어질 게 뻔한 냉전의식이나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문학,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힘들다. 1945년 이후 한반도 문학을 얘기할 때, 남한과 북한이 상대방의 작품과 작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문학은 점점 축소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 학계는 통일, 민족 같은 거시 담론을 더 이상 중시하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현실화된 지구촌의 다문화사회 흐름과 역행하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단일 민족의 신화에 더 이상 얽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작품/텍스트의 모래밭에서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선택하고 재배열하는 정전화와 문학사(서술) 자체가 인간의 정신적 산물이자 자유로운 영혼의 창조물인 문학예술에 자의적 위계질서를 부여하려는 일종의 폭력적 발상의 산물이니 그런 권력 담론 구축에 애쓸 필요가 없다는 포스트담론, 해체주의, 나아가 지적 허무주의가 학문 시장의 주류가 된 형국이다. 하물며 근대민족국가 시절의 낡은 담론인 단일 민족의 신화로서의 민족성, 민족적 특성을 회복하자는 주장은 지구촌 시대 탈근대사회의 변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치부된다.<sup>26</sup>

26 필자가 2016년 10월 15일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열린 '두만강포럼 2016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러한 한국 학계 동향을 소개하자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과 교원 리광희는 남측의 민족 단일성 통일교육의 부재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남측의 요즘 학문 풍토에서 문학사 자체가 권력담론이며, 젊은 세대들이 민족, 통일, 자주 같은 거대담론 자체에 염증을 느낀다고 하자 개탄하면서 남측의 학자, 교육자가 민족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포럼 사회를 본 연변대 아세아센터 주임 채미화(蔡美花) 교수도 거들었다. 통일의 정당성은 남북 당사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아시아 및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한데도 그것부터 사회적 동의를 되지 않는 남측 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남측 학자들은 남북 문학이 공유하는 민족적 동질성 찾기와 회복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필자가 현재 남측 정부와 사회의 '국민정서'(지배이념)는 예전의 단일 민족·국가 정체성의 신화를 버리고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에선 남북관계도 다문화적 다양성 포용정책의 틀에 수렴된다고 하자, 민족적 원칙이 없는 문화적 다원주의, 다문화주의적 포용성은 제국주의적 문화 통치 전략이거나 거기 포섭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다. 김성수, 「남·북·중의 코리아문학사 비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 남북의 정서적 통합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분단 지역 각각의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기득권을 양보하고 호혜적 연합/연방 실천안을 비정치 영역인 문화예술부터 시도해 보자는 말이다. 실제로 2000년대 10년간의 남북 관계사에서 문학예술, 체육, 종교 등 문화 분야 교류 협력이 경제 협력 다음으로 활성화되고 성과 또한 많았던 선례가 있으니 소프트파워의 위력을 믿고 그 교류 협력의 전례부터 복원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 통합 문학사 구상은 어떻게 할까? 우선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남북이 합의할 공통항보다는 차이가 극심한 20세기 근현대문학보다는 공통항을 훨씬 많은 19세기까지의 고대 중세시기 고전문학부터 천천히 단계적으로 통합 서술하자는 제안이 가능하다. 논란거리가 워낙 많아 쉽게 통합 서술 방법을 찾기 어려운 남북의 근현대문학보다는 공통항이 훨씬 많은 고전문학부터 통합 서술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남북 학계의 이념적 지향과 학술적 수준차 등 비대칭은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주체사상이 유일체제화된 1967년 이후 학문 발전이 정체된 결과 2000년에 나온 고전문학사가 여전히 1991년 사망한 김하명 원사의 학문적 역량과 업적을 별반 넘어서지 못한 북한의 고전문학 연구 수준과 1970,80년대 조동일 이후 질량 면에서 압도적인 수준에 오른 남한 학계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고전문학사 서술의 산술적 균분은 무의미하며 이러한 학문적 비대칭을 인정해야 진정성 담긴 통합 서술이 비로소 가능하다. 한창 주체사상을 유일체제화하면서 사상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억제하고 개인승배를 극대화했던 1967년도 말에 작가 전주걸이 남조선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하여 투쟁해야

---

통합 서술방안, 『화해와 포용: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과 교류의 새로운 경로』 2016 두만강포럼 국제학술대회 (2016년 10월 15일).

한다고 식언했던 것처럼 산술적 균분은 뜬금없이 느껴진다.<sup>27</sup>

다행히도 남북 코리아 문학사를 소통 원칙과 분단 극복 지향으로 서술한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 현대문학사』나 김병민, 김춘선 등 중국 조선족 학자들이 우리문학사를 ‘조선-한국’ 또는 ‘한국-조선’ 문학사로 병행 표기한 선례가 있다. 남북의 정치적 이념적 대결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디아스포라 학자, 특히 우리말글 사용에 능하고 남북과의 교류도 활발했던 조선족 학자에 의해 통합 문학사가 나온 것은 특기할 만하다.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는 1950년대 남한 시, 북한 시, 60년대 남한 소설, 북한 소설 식으로 남북한 문학을 10년 단위로 병행 서술하고 있다.<sup>28</sup> 이는 남북 통틀어 최초의 통합 문학사 서술이란 의의가 있다. 중국 연변대 교수였던 김병민, 허휘훈 등 4인 공저 『조선-한국 당대문학사』와 중국 중앙민족대학 교수였던 김춘선의 『한국-조선 현대문학사』에서는 남한을 ‘한국’으로, 북한을 ‘조선’으로 표기한 후 해방후 코리아반도의 두 나라 문학사를 병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sup>29</sup> 전자는 매 10년마다 시, 소설장르별로 각각 1절 조선문학, 2절 한국문학 순으로, 후자는 매 10년마다 1절 개황, 2절 한국문학, 3절 조선문학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분단 모국의 양쪽을 이념적 편향 없이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포용하려는 재외동포 학자의 배려와 노력은 그 자체로 인정할 만하다. 다만 동일 시기의 북측 조선문학과 남측 한국문학을 기계적으로 병렬한 병합 서술에 머문 점이 아쉽다.

단순 병합을 넘어서려면 다음 단계로 남북이 서로 자랑할 작가와 문학을 내세워 공통점을 찾는 것이다. 물론 남에서 ‘순수서정문학, 낭만주의문학, 모

27 전주길, 「남조선의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 『문학신문』 1967.11.10, 4쪽.

28 최동호, 『남북한 현대문학사』(파주: 나남, 1995)

29 김병민 외 공저, 『조선-한국 당대문학사』(연길: 연변대학출판부, 2000); 김춘선, 『한국-조선 현대문학사』(서울: 월인, 2001) 참조.

더니즘문학'을 앞세우고 북에서 '항일혁명문학, 수령문학, 선군문학'만 자랑스레 내세우면 공통항이 매우 적을 것이다. 무조건 반반씩 서술해서 한곳에 단순히 합해놓는 『조선-한국 당대문학사』 방식은 일종의 눈가림용 병렬, 단순 합산이다. 산술적 반분 후 들을 단순히 합산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전체 1이 되지 못한다. 전체는 부분의 대립적 총체이기에 변증법적 통합의 결과물은 통합 이전의 각 부분과 질적으로 달라져야 비로소 통합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가령 일제 강점기 문학사를 통합 서술할 때 정치적 이념적 가치를 지향하는 저항문학은 북에서 강조하는 빨치산 문예 같은 레지스탕스문학 성과를 포함하고, 훼손될 위기에 놓인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심미적 미적 자율성이 필요한 대목에선 남이 자랑하는 순수문학, 서정문학, 주지주의문학을 포함하면 '덧셈의 문학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빨갱이 또는 월북작가라 경원시켰고 북에서 부르주아반동, 순수문학, 자연주의 등 부르주아미학사상의 잔재로 매도했던 일군의 작가와 그들의 영혼이 담긴 작품들의 복원 복권 문제이다. 가령 조선문학가동맹 출신의 월북작가로 북한에서 전쟁 직후 숙청당함<sup>30</sup>, 김남천, 리태준, 김순석, 리원조, 설정식 등과, 1967년 주체문예이론에 동조하지 못하고 반종파분자로 숙청당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이자 사회주의 리얼리스트였던 한효, 안막, 안함광, 윤세평, 엄호석, 리상태, 이정구, 김민혁, 서만일, 홍순철, 김창석, 정률, 전재경 등 '휴전선에 떠도는 분단의 망령'들의 영혼과 그 외연적 실체인 비(非)주사 사회주의문학 작품과 담론의 복원, 복권이다. 통일문학을 향한 마땅한 타개책이 잘 보이지 않기에 고육지책으로 1945~67년 분단 문학의 고착화과정을 천착하여 문학사에서 배제된 이들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30 개념사적으로 볼 때 한국문학장의 '임화'와 북한문학장의 '림화'는 구별해서 표기해야 한다.

이 경우 남한의 월남 작가든 북한의 월북 작가든 그들의 작품과 문건은 모두 통합 문학사의 서술 대상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박남수, 양명문, 황순원, 구상, 최인준, 이기영 등 월남 작가의 재북 당시 문학활동<sup>31</sup>도 복원하고, 반대로 임화, 김남천, 이태준, 김순석 등 월북 작가들이 활발히 활동하던 1945~67년 『문학예술』 『조선문학』 『문학신문』 자료(1953~67)도 전수조사하여 거기 담긴 문학적 실체를 온전하게 복원해야 한다. 이들 분단 초기 '남북 작가의 상호인식'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공식 문학사에서 누락, 배제된 문학적 성과를 복원하고 그 주체를 복권시키면 통일 문학사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31 『문학예술』지에 실린 월남 작가의 재북 시기 발표 작품은 다음과 같다. 박남수, 「할아버지 2제」, 1948.7, 72쪽, 「내 손에 한장 유서가 있다」, 1949.8, 143쪽, 「상봉」, 1949.10, 138쪽, 「어서 오시라」, 1950.4, 50쪽; 양명문, 「용광로」, 1948.11, 114쪽; 최인준, 「소」, 1949.8, 255쪽; 이기영(李基榮=이기형), 「소설가(小說家) 황건(黃健)을 말함」, 1950.3, 22쪽, 「시인(詩人) 김상오(金常午)를 말함」, 1950.6, 39쪽.

## 참고문헌

- 김병민 외 공저, 『조선-한국 당대문학사』, 연길 : 연변대학출판부, 2000.
-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서울: 책세상, 2001.
- 김성수,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 『조선문학』(1946~2019)의 문학·문화사』, 서울: 역락, 2020.
- 김성수 외 공저,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2』, 서울: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 김춘선, 『한국-조선 현대문학사』, 서울: 월인, 2001.
-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고양: 역사비평사, 2011.
- 류만·최광일, 『조선문학사(16) 1990년대 문학』, 사회과학출판사, 2012.
- 미상, 『조선문학사:문학대학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6.
- 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새 민족문학사 강좌』, 파주: 창비, 2009.
- 민족문학사연구소 남북한문학사연구반 엮음,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서울: 소명출판, 2014.
- 최동호, 『남북한 현대문학사』, 파주: 나남, 1995.
- 김병로, 「통일 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26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2014. 1~34쪽.
- 김성수, 「북한 현대문학 연구의 쟁점과 통일문학의 도정」, 『어문학』 91호, 2006, 67~98쪽.
- 김성수, 「4.19와 1960년대 북한문학- 선동과 소통 사이: 북한 작가의 4.19 담론과 전유방식 비판」, 『한국근대문학연구』 30호, 2014. 7~40쪽.
- 김성수, 「통일 담론과 남북 문학사 소통방안」, 『민족문학사연구』 56호, 2014, 129~159쪽.
- 김재용, 「『겨레말 큰사전』을 통해 본 남북 문화교류의 새로운 지평」, 『역사비평』 제88호, 2009, 184~190쪽.
- 김재용, 「남북의 문학적 통합과 북한문학으로서의 재월북 작가 연구」, 『국어국문학』 168호, 2014, 75~92쪽.
- 김중희, 「남북한 문화이질화 현상과 문화통합의 실천적 과제」, 『한국문학논총』 제36집, 2004, 5~24쪽.
- 김중희, 「한민족 문학사의 통시적 연구와 기술의 방향성」, 『외국문학연구』 56호, 2014, 103~122쪽.
- 서동수, 「남북문학사 통합서술의 전망」, 『겨레어문학』 28호, 2002, 213~237쪽.
- 유임하 외 공저, 「북한 문학사의 쟁점」, 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새 민족문학사 강좌』 2권, 파주 : 창비, 2009, 453~494쪽.
- 이승윤, 「한국문학사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 『조선-한국 당대문학사』를 중심으로」, 『한국근대 문학연구』 25집, 2012, 311~339쪽.

이영미, 「남북한 통일문학사 기술의 과제와 전망」, 『한중인문학연구』 제50호, 2016, 55~78쪽.

홍종선, 「『겨레말 큰사전』의 성격과 과제」, 『한글』 제295호, 2012, 135~161쪽.

Liu, Lydia H. 저, 민정기 역, 『언어횡단적 실천: 문학, 민족문화, 번역된 근대성-중국, 1900~1937』,  
서울: 소명, 2005.

Reinhardt, Rolf 저, 최용찬 역,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서울: 소화, 2015(개정증보판).

## 영문 초록

### Conception of Holistic Literary History(1953~67) of the Korean Peninsular :

Focusing on analysis of discourses on reunification and literature of  
*Chosun-Munhak & Literature Newspaper*

Kim, Seong-su

Scholars of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solidified only their respective literary history on the divided Peninsular and considered each other as the third party over the last 7 decades sinc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on August 15. To overcome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take holistic approach to depiction of literary history of the two Koreas with inclusive perspective for narration of global Korean Diaspora literary history. It is time that we should desist from the precedent of depicting literary history of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eparately although the Korean literary history remained indivisible until 1945, and should explore measures for mutual communication and exchanges. For example, the two Koreas can join hands to depict Korean literary history by identifying and integrating common features in the doctrine of South-North regional equivalents or in the aesthetics of realism. All literatures of the two Koreas, which go beyond egocentrism, can be considered local literatures of the South and North which form the Korean Peninsula while exhibiting de-colonial modernistic characteristics. Thus, real substance of literature should be restored which have been excluded from literary history and literary education for reason of politics and ideology which fall under the real beyond literature. For that, we analyzed discourses on reunification and literature based on the approach of analysis of time series by classifying the article titles of North Korean literary magazines, e.g., *Chosun-Munhak* and *Literature Newspaper*(1953~67).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concept, 'reunification', was associated with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homeland, thereby playing 4 functions such as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labor mobilization within the system, criticism of the South Korea, and external propaganda. We are facing a challenge to restore literary substances which have remained excluded from existing literature history amid the division of the nation so as to enrich depiction of holistic literary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irrespective of whether the authors are South Korean who defected to the North or whether they are North Koreans who defected to the South.

---

•Key words : literature History, Unification literature, division literature, South Korean Literature history, North Korean Literature history, Korean Literature history[우 리문학사], *New Korean Literature History Lecture*(2009), *Chosun Literature History* (vol.16), *Chosun-Munhak*[North Korean Literature], *Literature Newspaper*





# 글로벌 인사이트

최근 미국 고위급 인사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의 안보 정세와 양안 평화와 안정의 전망 • 왕신셴(王信賢)





---

# 최근 미국 고위급 인사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의 안보 정세와 양안 평화와 안정의 전망

●  
왕신셴(王信賢)

대만 국립정치대 동아연구소 석좌교수

## I. 서론

2022년 8월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Nancy Pelosi)의 아시아 순방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전격적으로 이뤄진 대만 방문은 미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양안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중국은 대만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했는데, 특히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몇 년간 각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인사들이 많이 방문하면서 중국은 “대만 문제의 국제화”를 우려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올해 미국과 각국의 고위 인사들이 대만을 방문한 구체적 사례들을 정리하고, 중국의 우려와 반응,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제기된 대만 정책 및 한국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올해 10월 8일까지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대만을 방문한 것은 총 13차례이다. 그중 7차례는 현직 미국 의원 대

표단이었고, 2차례는 현직 주지사 대표단이었으며, 2차례는 전직 관료 공동 대표단이었다. 나머지 2차례는 전임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포함된 대표단이었다. 그중 3월과 4월의 방문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 시기였기 때문에 대만의 안보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5월 이후 방문단의 관심사항은 안보, 경제, 과학기술,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었다. 그중 8월 펠로시 의장의 방문단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이어 9월 의회 회기가 재개되기 전 의회 대표단이 4차례 대만을 방문했는데 중국의 항의를 받지 않는 않았다. 2차례의 주지사 방문단은 그 권한에 따라 경제·무역, 교육 분야의 협력에 관심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미국 대표단은 일반적인 경제 및 문화 교류 외에 주로 세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는 대만의 군사안보 문제이다. 특히 미국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했다. 둘째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전 문제이다. 특히 TSMC의 역할에 관심을 보였는데, 여러 차례의 회동에서 TSMC의 고위층 인사가 초청 대상이었다. 셋째는 미국 상하원에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이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미국이 여전히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에 방문단에 속한 인사들의 다수가 의회 의원, 주지사, 퇴임 관료였는데 현직이 아니거나 실질적인 행정 권한이 없는 인사들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국회의원들도 과거보다 대만을 방문하는 횟수가 많았지만, 주로 일본과 유럽에서 온 경우가 많았다(<표 2>를 참조).

〈표 1〉 2022년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대만 방문

일자	대만 방문 인사	방문 목적과 일정상의 특징
3/1-3/2	마이클 멀린(Michael Glenn Mullen) 전 합참의장이 인솔, 구성원으로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정책차관, 메건 오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고문,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에반 메데이로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	이 방문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견한 초당파 고위급 대표단으로 대만해협 평화, 대만-미국 안보협력 등 중요한 의제에 대해 대만 고위급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함. 메리어트 호텔에서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주석 접견.
3/2-3/5	미국 전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대만 고위급 인사들과 접견. 위엔산 호텔의 만찬에 TSMC의 모리스 창 회장 참석. 폼페이오 장관은 원경기금회에서 연설을 통해 대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4/14-4/15	미국 연방상원 예산위원회 공화당 수석의원 린지 그레이엄, R-SC 상원 외교위원장 로버트 메넨데스, D-NJ 상원의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공화당 수석의원 리처드 버, R-NC 국토안보위원회 공화당 수석의원 로버트 포트먼, R-OH 연방 상원위원 벤 사세, R-NE 연방 하원의원 로니 잭슨, R-TX 등 총 6명의 국회의원	2022년에 처음 대만에 온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 방문단. 군용기를 타고 대만을 방문하는 등 초당파 대표단. 대만의 안보 문제에 관심.
5/30-6/1	미국 연방 상원의원 Tammy Duckworth, D-IL	Dakworth는 2021년 6월에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했으며, 이번에 다시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 관리들과 미국-대만 관계, 지역 안보, 무역 및 투자, 글로벌 공급망 및 기타 공동이익 등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7/7-7/9	미국 연방 상원의원 Rick Scott, R-FL	스콧은 대만우호법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으며, 올해 4월 미국 하원의원으로는 최초로 리투아니아 주재 대만대표부를 방문. 대만-미국 안보 및 무역 관계 등 의제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 교환.
7/18-7/21	Mark Esper 전 국방장관, Stefano Stefanini 전 이탈리아 대통령 외교보좌관, Barry Pavel 대서양 협의회 수석부회장이 이끄는 미국 대서양 협의회 대표단	Atlantic Council은 초당파적인 미국 싱크탱크. 이번 방문에서 대만 정부 및 관련 부처의 고위급 관리들을 방문하여 대만 싱크탱크 및 재계 관계자들과 교류

일자	대만 방문 인사	방문 목적과 일정상의 특징
8/2-8/3	미국 하원의장 Nancy Pelosi, D-CA 인솔. Gregory Meeks, D-NY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의장, 연방하원 재향군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Mark Takano, D-CA, 연간 회계 위원회 부의장 Suzan DelBene, D-WA, 연방 하원 정부 감독 및 개혁위원회 경제 및 소비 정책 소위원장 Raja Krishnamoorthi, D-IL 및 연방 하원의원 Andy Kim D-NJ 등 총6 명의 연방 하원의원	2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 입법원을 방문, 총통부에서 오찬, 국립 인권박물관 방문, 시민단체 대표와의 라운드 테이블 포럼. 펠로시 의장은 양측이 대만관계법에 따라 안보, 경제, 좋은 거버넌스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
8/14-8/15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그룹 의장 Ed Markey, D-MA가 초당파 대표단을 인솔. John Garamendi, D-CA, Alan Lowenthal, D-CADon Beyer, D-VA, Aumua Amata Coleman Radewagen, R-AS 등 총 5명의 의원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후 첫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입법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를 방문하여 안보와 경제관계 등에 대한 의견 교환
8/21-8/24	Eric Holcomb 인디애나 주지사가 경제무역 및 학술 대표단 인솔	인디애나는 미국에서 대만의 첫 번째 자매주. Eric Holcomb은 대만을 처음 방문. Eric Holcomb은 대만 정부기관 및 반도체 제조업체 대표를 만나고 대만과의 많은 무역 및 과학기술 및 산학협력 MOU를 체결
8/25-8/27	미국 상원의원 Marsha Blackburn, R-TN	Marsha Blackburn 상원의원은 "Senat Taiwan Connection"의 일원으로 대만에 매우 우호적이며, 방문 기간 동안 대만 안보, 경제무역 관계 등의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
8/30-9/1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 Doug Ducey 대표단	<미국 비즈니스의 날> 행사에 참가하여 대만 반도체 관련 산업체 및 반도체 전문대학이 있는 대학 대표들을 만나 하이테크 산업 및 관련 분야에서 쌍방의 협력과 교류를 심화
9/7-9/9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정보 및 특수작전 소위원회 부의장 Stephanie Murphy, D-FL, 연방 하원의원 Scott Franklin, R-FL, Kai Kahele, D-HI, Joe Wilson, R-SC, Andy Barr, R-KY, Darrell Issa, R-CA, Claudia Tenney, R-NY, Kat Cammack, R-FL , 총 8명의 하원의원 대표단	미 하원 117차 회기에서 최대 규모의 하원의원 대표단. 대만과 미국의 관계, 지역 안보, 경제무역 등의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
9/26-9/29	Mike Pompeo 전 미국 국무장관	제1회 <글로벌 대만 기업인 포럼>에 참석하여 연설. 대만상공회의소연합회 개최식 참석.

〈표 2〉 미국 외 기타 국가 국회의원 대표단 대만 방문

일시	국가	방문 인사
4/10-4/14	스웨덴	단장: 스웨덴 의회 "대만-스웨덴 의회 의원협회" 주석 Boriana Åberg 의원 및 스웨덴 "유럽 의회" Charlie Weimers 의원. 구성원: Kerstin Lundgren 스웨덴 의회 부의장, Björn Söder, Lars Adaktusson, Markus Wiechel, Åsa Coenraads, Ann-Sofie Alm, Lars Püss, Alexander Christianson 및 유럽 의회 관련 정당의 정책 고문 등 총 12명
5/3-5/7	일본	자민당 청년국장 고쿠라 마사노부 의원이 대표, 스즈키 켄와, 스즈키 하야토, 야마구치 신, 니시노 타로 의원 등 일본청년회의 간부 등 총 11명.
6/5-6/10	슬로바키아	Milan Laurencik 슬로바키아 국회 부의장, Peter Osusky 국회친선모임 회장, Juraj Droba Bratislava주 주지사 등 10명
6/8-6/13	프랑스	法國參議院外交暨國防委員會副主席、友台小組副主席Joël Guerriau, 財政委員會副主席Vincent Eblé議員, Sylvie Goy-Chavent議員, Dany Wattebled議員, Ludovic Haye議員, 共5位跨黨派朝野議員. 프랑스 상원 외교 및 국방 위원회 부의장, 대만 우호 그룹 부의장 Joël Guerriau, 재정위원회 부의장 Vincent Eblé, Sylvie Goy-Chavent, Dany Wattted, Ludovic Haye 등 초당파 의원.
7/19-7/21	유럽연합	유럽의회 부의장 Nicola Beer
7/25-7/27	일본	스즈키 코스케 일본 중의원 의원
7/27-7/31	일본	일본의 초당파 의원대표단 "일본의 안보를 생각하는 의원 모임"
8/22-8/24	일본	일본 국회 초당파 대만우호 의원모임 "일화 의원 간담회" 회장 후루야 게이 지 중의원, 간담회의 사무국장 키하라 미노루 중의원
9/7-9/12	프랑스	Cyril Pelleva 프랑스 상원 유럽사무위원회 부위원장, Olivier Cadic 외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Alain Marc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Pierre-Antoine Levi, Brigitte Devésa 등 5명의 초당파 의원
9/18-9/23	체코	체코 상원 〈교육·과학·문화·인권·청원위원회〉 위원장 Jíí Draho, 교육부 차관 Radka Wildova, 과학기술부 차관 Jana Havlikova, 체코 국립박물관장 Michal Luke 등 관료 및 학자
10/2-10/6	독일	독일 의회 대만우호 소위원회 의장 Klaus-Peter Willsch와 5명의 부의장(Katrin Budde, Dr. Till Steffen, Dr. Rainer Kraft, Caren Lay, Frank Schäffler)
10/6	일본	일본 국회 초당파 대만우호 의원 모임 〈일화 의원 간담회〉 회장 후루야 게이 지 중의원 의원이 20명의 중의원 인솔

## II. 중국의 우려와 반응

미국을 필두로 한 민주주의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이 잇달아 대만을 방문함으로써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중 미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반발이 가장 격렬했다. 베이징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미국이 대만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행위인 동시에 대만 민진당 정부가 미국에 의지하여 독립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결합된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공산당의 우려와 반응을 설명하고자 한다.

### 1. 중국 공산당의 우려와 걱정

#### ① 더욱 국제화된 대만 문제

펠로시의 아시아 방문 일정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일본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해 격렬히 반대했기 때문에 대만 방문이 미정 상태에 있다가 확정으로 바뀐 상황과 그녀가 대만을 떠난 이후 중국의 보복이 모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펠로시의 방문을 지지했기 때문에 대만 문제는 더욱 국제적 이슈가 되었다.

#### ② 도미노 효과에 대한 우려

두 가지 측면에서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다. 우선은 다른 국가들이 따라하게 되는 시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즉 다른 주요 국가의 중요한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대만을 방문하게 되는 것으로 <표2>에 나타난 것과 같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더욱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행정부 수장이 대만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또 다른 우려사항이다. 펠로시는 “나의 이번 방문이 또 다



른 방문의 길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다.

### ③ 대만의 주요 정당과 대중들의 지지

중국은 대만에 대해 줄곧 세 가지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대만 당국에 대한 기대, 대만 대중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신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만의 주요 정당과 대중들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펠로시의 대만 방문 사건과 이를 통해 드러난 것은 중화민국의 주권과 독립에 대해 많은 지지 의사를 표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이 대만 당국과 대만 대중들에게 품고 있던 기대감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 2. 중국의 대만정책에 미친 영향

이 사건은 중국공산당이 설정한 대만 정책을 크게 손상시켰다. 특히 20차 당 대회 이전의 대만 정책 기조에 큰 타격을 주었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구상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정책 방향과 속도의 변화

▲ 방향의 측면에서 볼 때,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정책의 핵심은 줄곧 ‘대만 독립에의 반대’, ‘통일의 촉진’, ‘경제사회적 융화의 촉진’, ‘외부 세력의 간섭에 대한 반대’라는 네 가지였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 독립에의 반대’와 ‘외부 세력의 간섭에 대한 반대’에 강도를 높일 것이다. 특히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는 것, 이른바 ‘미국과 대만의 결탁’을 차단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이다. ‘대만 독립에의 반대’와 ‘외부 세력의 간섭에 대한 반대’를 결합시킨

다는 방향성 아래 중국은 8월 10일 중국국무원 대만판공실을 통해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 사업> 백서를 발표했다.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 정치보고도 이 둘의 결합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 속도의 측면에서는 중국공산당이 대만에 대한 통일의 시간표를 갖고 있는지가 항상 논쟁의 화두였다. 중국공산당이 공식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은 “양안의 오랜 정치적 분열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그레도 둘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만 동포들이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신시대에 중국공산당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체방략>을 제기한 것을 보면 확실히 시간표를 암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주관적 염원에 따르면 2049년 전에 통일을 완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2024년, 2027년, 2035년이 중요한 분기점이다. 현재로서는 펠로시 대만 방문이라는 사건의 여파가 통일 시간표의 진행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적어도 2024년에 대만 총선거와 미국 대선의 결과가 베이징이 예상하는대로 되지 않을 경우, 중국이 대만에 대해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 ②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 문제 해결의 총체방략을 훈련한 중국

중국공산당 19차 6중전회에서 채택된 <제3차 역사결의>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시대 중국공산당의 총체방략’(이하 ‘총체방략’으로 표기)이 제기된 이후, 총체방략은 대만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사유방식의 최상층 설계가 되었다. 그중 하나의 임무는 각종 시스템 자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통일 전선전술 뿐만 아니라 군사(전략 자원부대 포함), 외교, 국가안보, 경제 등 관련 시스템의 역할과 자원을 더욱 증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해 국무원 대만판공실, 인민해방군(내부 각종 시스템 포함),

외교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안전부 및 인터넷통신 부서 등 각 부처의 결합된 대응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까지 비난의 대열에 합류했다.

### ③ 군사훈련이 드러낸 정보

중국공산당은 인민해방군 동부 전구(戰區)가 대만 주변 해역의 6개 구역(이후 7개 구역으로 확대)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실탄 사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대만 해공역을 포위하고 봉쇄한 것과 같다. 이어서 남해, 황해, 발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1995년과 1996년의 미사일 위기 때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대만 독립의 반대’에서 ‘외부세력 개입에 대한 반대’로의 변화: 과거에 지룽(基隆)과 까오슝(高雄) 외해로 발사된 미사일이 의미하는 것이 해방군의 ‘독립 반대’ 능력이었다면, 이번에 동북부, 동부, 남부(바스 해협(Bass Strait)), 즉 중국공산당이 표시한 3, 4, 5구역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반개입 능력이다.

▲ 미사일 발사의 차원에서 현장에서의 실제 군사행동 차원에서의 변화: 과거에는 미사일 발사와 중국 대륙 연해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군함과 군용기의 훈련이 실제 현장에서 이뤄졌다. 특히 동부 해역에서의 훈련은 인민해방군이 과거 20여년 간 군사적 능력을 크게 증강시켜 왔음을 보여준다.

▲ 대만 영해 진입과 해협 중간선의 침범: 이번에 중국이 설정한 훈련 구역 중 일부는 모두 대만 영해 기선, 심지어 영해까지 진입한 것이며, 실제 훈련에서 적지 않은 군함과 군용기가 해협 중간선을 넘어 군사행동을 함으로써 해협 중간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중국의 군사훈련 목적이 실제로 군사적 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결의를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대만 민심의 동요와 내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성격이 강력한 힘을 통해 돌격하는 것에 능하며, 만약 상대가 반격하지 못하면 새로운 상태가 뉴노멀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 내부 권력 경쟁이 그랬고 대외관계 역시 그러한 양상을 보였다. 일본 센카쿠열도(조어도 주변 해공역)와 홍콩 문제 또한 그러한 양상을 보였다.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 또한 그랬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인근 대만 영해, 해협 중간선을 넘는 것이 이미 뉴노멀이 되었고, 심지어는 기정사실화 되었다.

### III.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의 대만 정책 분석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 정치보고는 시진핑의 권력을 확립한 것 외에도 시진핑이 계획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경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중요한 화두였다. 베이징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단결과 분투 외에도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정치 보고가 대만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과거 당 대회에 비해 가장 적은 500여자에 불과했지만 ‘할 말은 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공산당이 ‘민족의 부흥’과 ‘미중 경쟁’의 관점에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 1. 정치 보고의 대만 관련 내용

정치 보고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임무’라는 말로 시작하여 ‘신시대 대만 문

제 해결을 위한 중국공산당의 총체방략'을 최상위 설계로 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평화통일과 일국양제' 및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컨센서스'를 언급했다. 또한 2019년 1월 2일 시진핑의 연설에서 언급된 "민주적 협상을 통해 일국양제의 대만식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정신을 포함시켰다. 대만정책 측면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통일 촉진'과 양안의 융합 발전을 강조하는 '융합 촉진', '독립 반대'와 '외부세력 간섭에 대한 반대' 등을 담고 있다. 마지막에는 '민족 부흥과 국가 통일'로 끝을 맺는다. 대만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정책적 연속성과 현 정세를 결합해 시진핑의 의지가 담긴 보고라고 할 수 있다.

## 2. 대만독립의 반대와 외부세력의 간섭에 대한 반대의 연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 보고는 대만 정책에 대한 초점을 '대만독립의 반대'와 '외부 세력의 간섭에 대한 반대'의 연결에 두고 있다. 이번 20차 당대회 정치보고는 세 군데서 대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과거와 미래 부분에서 모두 언급하고 있다. '대만독립의 반대'는 대만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일관된 정책이며, 이번 중국공산당 당장(黨章) 개정에도 '대만 독립에 대한 반대와 억제'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대만 문제가 질적으로 변화하여 단순한 양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앞서 서술한 펠로시의 대만 방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규제, 현재 미국 상·하원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대만 정책법> 등이 중국공산당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중국공산당 당국이 공개적으로 "미국이 대만을 통해 중국을 억제한다."고 비난하는 이유이며, 대만 민진당 정부가 "미국에 의존하여 독립을 추구하려고 한다."거나 "미국과 대만이 결탁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 3. “무력 사용을 포기하는 것을 절대 약속할 수 없다.”는 표현의 재언급

정치 보고는 또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는 것을 결코 약속할 수 없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택 사항으로 남겨 놓겠다.”고 언급해 2002년 16차 당 대회에 이어 다시 한 번 ‘무력 사용의 옵션’을 정치보고에 포함시켰다. 두 가지 조건과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평화통일을 위해 최대의 성의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즉,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최후의 선택 사항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력 사용의 ‘대상’이다. 주로 외부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대만독립’ 분열 분자를 겨냥하고 있으며, 결코 광범위한 대만 동포들을 겨냥하지 않는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가치가 있다. 무력 사용의 대상으로 먼저 ‘외부 세력’을 논한 다음에 ‘대만독립 세력’을 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양안 관계의 질적 변화를 반영한다. 즉, 미중 전략 경쟁 구조 하에서 우선 대상이 외부세력이라는 것이다. “광범위한 대만 동포들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표현에서는 대만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만 내부를 분할하고 차별화하려는 것이다.

### 4. 인사 배치를 통해 보는 중국의 대만정책 방향 전망

이번 인사 배치에서는 정치국 위원으로 69세 왕이(王毅)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의 승진과 72세 장여우사(張又俠) 군사위 부주석의 유임이 연령을 초과했음에도 승진한 것이 눈에 띄는데, 백년 간 미중유의 대변국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 배치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번에 국무원 대만판공실을 담당하던 네 명의 주요 인사가 모두 중앙위원회에 선출되지 못했다. 외교 부문에서는 왕이 외에 외사 업무를 담당하던 류젠차오(劉建超), 치위(齊玉), 류하이싱(劉海星), 친강(秦剛) 등이 모두 중앙위원회에 올랐다. 이는 앞으로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임이 전임자의 경험에 따라 외교 부문에서 전입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외부세력의 간섭에 대한 반대’의 결의를 더욱 과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왕후닝(王滬寧)이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직을 승계할 것이라는 점이다. 당내에서 왕의 역할 및 새로운 직책으로 보아 향후 5년간 시진핑이 새로운 대만 담론을 내놓을지, 또는 대만과의 ‘민주적 협상’을 진일보하게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가 앞으로의 주요 관전 포인트이다. 왕후닝이 이 임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군 인사 측면에서는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오른 허웨이둥(何衛東)이 과거에 31 집단군, 난징 군구, 동부 전구 등에 속해 있었는데 모두 대만에 대한 ‘군사 투쟁’과 관련이 있다. 2022년에는 중앙 합동전 지휘센터에서 지난 8월 대만에 대한 군사훈련을 계획한 주요 멤버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임무는 군사력을 통해 독립 반대와 외부세력의 간섭에 대한 반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 IV. 대만해협 정세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양안 간 정치관계, 군사안보 문제, 나아가 반도체 등의 의제를 막론하고 결정적 변수는 미중 관계이다. 즉 양안 관계의 본질은 바로 미중 관계라는 것이고 이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진영 간 대립이 더욱 뚜렷해졌고, 중국-러시아-북한의 입장도 갈수록 일치하고 있다. 미중 양강의 경쟁에서 모든 의제가 카드가 된다. 이와 관련해 아태지역에서는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의 의제가 모두 연동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대만해협 안보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정치와 경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정치적 영향

현재 인민해방군의 ‘반개입/지역거부 능력’은 이미 점차 확고해지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8월 대만 포위 훈련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반개입’ 훈련이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꺾을 포함해 모두 중국의 타격권에 들어간다.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대만해협 전쟁에 참전하면 중국도 한국과 일본을 적대국으로 간주할 것이고, 여기에 북한 요인까지 연결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미중 강대국 간의 경쟁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위험 회피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지만 ‘양대 강국 사이의 소국’이라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안보적 책임의 부담을 요구받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 이익 및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종종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사이에서의 조화로운 발전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해 왔다. 최근 펠로시 의장의 한국 방문과 미국 측이 제기한 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4자 동맹(Chip 4)에 대해 한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대만해협 유사사태의 긴장이 높아지면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즉 명확한 태도 표명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한국이 직면해야 할 문제이다.

### ▲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고려해야 할 것

한미 간 상호방위조약은 비록 쌍방의 행정적 통제 하에 있는 영토가 공격받을 때만 방위 의무가 제한되어 있지만, 미국의 압박에 따라 최소한 후방 지원을 강요받게 될 수 있고 주한미군의 군사행동까지 더해져 중국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태도가 얼마나 강경할 것인지, 한국에 대한 전략적 요구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다.



한국도 북한과의 안보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대만해협에 유사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국은 북한을 통해 한국(그리고 일본)을 압박하고 나아가 미국과 일본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할 수 있다. 한국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대만해협의 유사 사태가 한반도의 유사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군의 후방을 지원하면서도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2. 경제적 영향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에너지 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일 양국의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만약 충돌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고 범위가 확대되면 해운이 봉쇄되는 현상이 나타나 양국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만과 한국은 성숙 공정 반도체와 첨단 메모리 반도체에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 특히 TSMC와 삼성 간에 경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Morris Chang)이 직접 삼성을 중요한 경쟁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만약 미중 경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한국은 여전히 양대 강국 사이에서 위험 회피 전략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때로 미국과 한국 간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하이테크 산업사슬 재편에서의 지위, 특히 인터넷, 통신, AI, 우주 공급망 등의 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미중 간의 대립이 완화된다면 이는 당연히 한국의 좋은 선택안이 될 수 있다.

▲ 단기적으로 대만해협의 갈등이 고조되고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삼성은 TSMC 파운드리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업이

될 것이다. 수주 효과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

▲ 그러나 전반적으로 선진공정 경쟁 외에 대만과 한국 간에는 기타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군사적 충돌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외국 자본의 신뢰와 투자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도 외국자본 철수의 충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며, 금수 조치가 취해지면 한국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육로는 북한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 따라서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충돌의 규모와 기간에 따라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 충돌의 범위가 작고 시간이 짧을 경우 한국에 수주 이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충돌이 확대되고 시간이 길어질 경우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 3. 대만해협의 안보위기 발생 시 한국 정부의 대응책

대만해협에서 안보위기가 발생해 전쟁이 임박할 경우 한국은 즉시 안보와 평화의 이니셔티브를 제기해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의 최선의 방책은 당연히 전쟁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중립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일단 연루의 압박을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양자적 대응을 피해야 한다.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한국을 돌볼 겨를이 없을 것이며 한국은 여전히 본토를 방어하고 북한의 군사행동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구축 기제를 구축해서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피하는 것 역시 한국이 고려해야 할 목표

가 될 것이다.

▲ (대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이 대만을 지원해 주길 바라지만) 최대한으로 미군에게 후방 보급을 하는 역할 정도만 담당함으로써 중국의 보복을 피해야 한다.

▲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의 개입 정도와 관계없이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은 바로 인질이 될 수 있으며, 이때 중국의 민족주의가 극에 달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물론 교민들까지 중국 대중들의 화풀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민 보호가 매우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나 한국 국내적으로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한국인들의 반중(反中) 정서의 수준이 사상 최고에 이르렀다. 만약 앞에서 언급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한국인들의 반중감정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교민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대중들의 대대적인 비판을 받고 시위로 변질 수도 있다.

▲ 경제 및 산업 측면에서 말하자면, 해외의 산업 체인은 예방적이고 효과적인 통합을 필요로 한다. 일단 본토와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으면 해외의 완전한 생산 체인은 여전히 가동하여 상업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 V. 결론

본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치 보고든 고위층 인사 배치든, 향후 5년간 중국은 모든 정책의 중점을 대미관계에 두게 될 것이다. 외교와 군사안보적 형세를 막론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 시슬과 공급망의 안정성과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고, 과학과 교육으로 국가를 부흥시키는 자주적 혁신능력 강화에 힘쓸 것이며, 미국의 확대 관할권을 막기 위해 '전면적 의법 치국'에 해외 관련 분야 입법을 강화할 것이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외부 안보

와 내부 안보를 통합하고 발전과 안보를 통합하려는 것도 같은 논리의 선상에 있다. 물론 본문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양안 관계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 이슈와 관련하여, 현재 중국공산당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다원적이고 강은 양면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교훈과 서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력을 평가해 보면 향후 5년간 중국공산당의 무력 통일의 기회는 크지 않다. 오히려 회색지대 충돌, 협박을 통해 협상을 강요하는 베이징 모델 위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만이 대만 독립의 레드 라인으로 정의한 것을 밟았는지의 여부와 미국이 실질적으로 대만 독립 움직임에 기여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중국의 주관적 결정에 달려 있다.

현재 중국공산당 권력구조로 볼 때 시진핑의 의지가 무엇보다 관건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20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정치국 상무위원의 명단을 봤을 때 후계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이 대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강경한 캐릭터로 역사적 지위를 추구하는 지도자인 시진핑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중에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면, 첫째 대만 문제는 시진핑이 21차 당 대회에서도 권력을 연장할 수 있는 정치적 업적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대만에 대해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이다. 두 번째는 앞으로 5년간 시진핑의 권력이 여전히 공고할 것이다. 대만 문제에 있어서 '독립의 반대'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면 5년 후 더 좋은 시기를 위해 참고 기다릴 수 있다. 세 번째는 시진핑이 나이가 들면서 '대만 문제 해결'에 대해 어느 정도로 긴급하게 느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모든 문제는 대만의 미래 운명과 연결되어 있고, 아태지역 전체의 안보가 걸린 문제인 만큼 대만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 이슈

---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솔직한 마음 · 박주화





---

#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솔직한 마음

●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I. 연구 배경

통일 필요성, 평화적 분단, 세대론은 통일인식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이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하락세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사실도,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2022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통일연구원의 조사에서는 53.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서는 46%로 나타났다.<sup>1</sup>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평화적 분단에 대한 선호도는 상승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평화적 분단에 동의하는 비율은 56.9%였다.<sup>2</sup> MZ

---

1 통일연구원 조사는 통일 필요성을 4점 척도, 통일평화연구원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김범수, 「통일에 대한 의식」 『2022 한국인의 통일의식: 기로에 선 평화, 다시 묻는 통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대회 (2022년 9월 27일); 박주화 외 공저, 『2022 KINU 통일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22)

2 박주화 외 공저, 『2022 KINU 통일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22).

세대의 통일인식에 대한 우려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이다.

2022년 7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는 통일 필요성, 평화적 분단, 세대론 중심의 통일인식 담론에 작지만 의미 있는 파문을 던지고 있다. 조사에서는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지 질문하였고 응답자의 4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세대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전국지표조사는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하였다. 통일된 단일국가를 남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선택한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선택한 비율은 과반이 넘는 52%, 한 국가 내 두 개의 체제를 선택한 비율은 8%, 현재와 같은 2국가를 선택한 비율은 통일국가를 선택한 비율과 비슷한 17%였다. 남북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도 세대 간 차이는 없었다.<sup>3</sup>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50% 수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40% 수준, 남북이 통일된 국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10% 후반인 결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도 달라진 것이라는 단순한 해석은 세 응답에 나타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차이를 쉽게 설명할 수 없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에서는 세대 간 차이가 있지만 다른 두 질문에서는 세대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어느 질문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진짜 생각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가능하다.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50%인지 40%인지 18%인지에 따라 정책이나 연구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응답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진짜 마음인지를 살피는 연구는 아

---

3 전국지표조사,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75호 (2022), <<http://nbsurvey.kr/archives/4721>>



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통일인식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노력들은 통일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의 비율의 시계열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 그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세 응답이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의 서로 다른 측면을 드러내는 반응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가 없다면 세 질문이 통일인식의 다차원성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도 불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 응답의 차이를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활성화되는 정도의 차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사회적 규범이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찬성하고 반대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규범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할지에 대한 주관적 신념이다. 사회적 규범은 대상에 대한 태도와 함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이다.<sup>4</sup> 주관적 규범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자 하는 동기(정확성의 동기),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동기(소속감의 동기)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sup>5</sup>

통일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규범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소원’으로 대표되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다른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오지각과 통일을 반대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생성한다.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부지불식간 통일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신념보다는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

4 Icek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no. 2 (December 1991), pp. 179-211.

5 Robert B. Cialdini and Noah J Goldstein, “Social Influence: Compliance and Conform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5 (July 2003), pp. 591-621.

는 응답을 강요하고 있을 수 있다. 결국 통일이라는 단어, 또는 통일에 대비되는 분단이라는 단어는 사회적 규범을 강력하게 환기하는 가치-적재적(value-laden)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통일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보면 통일 또는 분단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질문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환기시켜 응답자는 통일의 규범에 부합하는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통일이 포함되지 않은 질문은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비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은 통일에 대한 응답자의 신념을 강하게 물어본다는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남북이 살아가는 방식을 묻는 질문은 통일이라는 표현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규범을 암묵적으로, 그러나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질문이 상기하는 사회적 규범의 수준이 50%, 40%, 18%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 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기보다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실제로 설명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데이터

본 연구의 분석은 통일연구원의 2022 KINU 통일인식조사의 데이터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2022년 KINU 통일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22년 4~5월 대면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이다. 표본은 2022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되었다.

## 2. 종속변수

첫 번째 종속변수는 통일의 필요성으로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 문항은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문항인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이었다. 첫 번째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척도(1점: 전혀 필요 없음, 4점: 매우 필요함)상에서 이루어졌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두 번째 문항은 ‘귀하는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었으며 7점 척도(1점: 전혀 필요 없음, 4점: 보통, 7점: 매우 필요함)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두 번째 문항은 통일이라는 표현 대신 남북이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상태에 대해 질문했다는 점, 그리고 7점 척도를 사용하여 통일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반응을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문항과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종속변수는 한반도의 미래상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4가지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한반도의 미래상의 보기는 다음과 같다: ① 남북 정부가 각각 존재하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 ② 남북 정부가 각각 존재하고 경제통합만 이루어진 형태, ③ 군사/외교권은 중앙정부에게 있고, 그 외 권한은 남북 정부가 각각 갖는 형태, ④ 단일한 중앙정부(통일정부)만 존재하는 형태.

마지막 종속변수는 평화적 공존에 대한 태도로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점: 전혀 동의 안 함, 3점: 보통, 5점: 매우 동의함).

### 3.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통일에 대한 태도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식이다. 통일에 대한 태도는 통일연구원이 개발한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 toward unification of Korea; ATU-K) 중 인지적 태도를 측정하는 4문항, 정서적 태도를 측정하는 6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sup>6</sup> 모든 문항은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통일에 대한 인지적 태도를 측정하는 4문항은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 '남북한 통일은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로 각각 통일을 편익, 민족정체감, 전쟁위협 감소, 평화증진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내용이다. 통일의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신념이라는 점을 고려 4개 문항을 개별적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통일에 대한 정서적 태도는 통일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감정(무섭다, 불안하다, 화가난다, 설렌다, 기쁘다, 행복하다)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통일에 대한 정서는 다시 요인분석을 통해 '무섭다', '불안하다', '화가난다'의 평균을 부정 정서로(Cronbach's  $\alpha = .80$ ), '설렌다', '기쁘다', '행복하다'의 평균을 긍정 정서(Cronbach's  $\alpha = .88$ )로 명명하고 분석에 포함하였다.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식은 4개 문항(5점 척도) 평균을 구해 분석에 포함하였다. 4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내 주변 사람들(예: 가족, 친구, 직장 동료)은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것 같다 ② 내 주변 사람들(예: 가족, 친구, 직장 동료)은 내가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길 원하는 것 같다 ③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것 같다 ④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통일을 지지하길 원하는 것 같다. 4개 문항의 문항 간 신뢰도는 .88이었다.

6 박주화 외 공저,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20).

### III. 연구결과

4개 종속변수와 7개 독립변수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해 연령에 따른 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S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sup>7</sup>

<표 1> 11개 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오차

	사례수	통일 필요성	단일국가 필요성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평화적 분단	통일의 인지적 태도	
						경제번영	민족정체성
전체	1000	2.6(.03)	3.2(.04)	2.3(.04)	3.5(.03)	3.6(.03)	3.6(.03)
20대	174	2.3(.06)a	3.0(.10)a	2.0(.09)a	3.8(.07)a	3.4(.07)a	3.4(.07)a
30대	151	2.4(.06)a	3.0(.10)a	2.0(.10)a	3.6(.08)a,b	3.5(.07)a,b	3.5(.08)a,b
40대	188	2.5(.06)a,b	3.2(.10)a,b	2.3(.09)a,b	3.5(.08)a,b	3.6(.07)a,b	3.5(.07)a,b
50대	196	2.8(.07)b,c	3.5(.10)b	2.6(.09)b	3.3(.08)b	3.8(.07)b	3.7(.06)b
60세+	291	2.9(.06)c	3.2(.08)b	2.4(.07)b	3.3(.07)b	3.6(.05)a,b	3.8(.05)b

  

	사례수	통일의 인지적 태도		사회적 규범	통일 부정정서	통일 긍정정서
		전쟁위협 해소	평화증진			
전체	1000	3.9(.03)	3.8(.03)	2.8(.02)	2.5(.03)	2.8(.03)
20대	174	3.7(.07)a	3.6(.06)a	2.6(.06)a	2.6(.07)	2.5(.06)a
30대	151	3.9(.08)a,b	3.8(.07)a,b	2.6(.06)a	2.5(.07)	2.6(.06)a
40대	188	3.9(.07)a,b	3.8(.07)a,b	2.8(.05)a,b	2.5(.06)	2.7(.07)b
50대	196	4.0(.06)b	3.9(.06)b	3.0(.06)b	2.5(.06)	3.0(.06)b
60세+	291	4.1(.05)b	3.9(.05)b	3.0(.05)b	2.5(.05)	3.0(.05)b

먼저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 통일에 대해 느끼는 사

7 통계치 옆에 표시된 a, b, c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집단을 의미한다. 같은 집단에 포함된 통계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통일 필요성을 예를 들면 20대, 30대는 a집단, 40대는 a집단과 b집단, 50대는 b집단과 c집단, 60대 이상은 c집단에 포함되어 있다. 20대, 30대, 40대의 통일필요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모두 a집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40대와 50대는 b집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 필요성 인식에 차이가 없다. 같은 논리로 50대와 60대 이상의 통일 필요성 인식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20대 및 30대의 통일인식(a집단)은 50대(b집단)와 60대 이상(c집단)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40대(b집단)와 60대 이상(c집단)의 통일인식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회적 압력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국민은 통일에 대해 생각하거나 통일에 대한 생각을 표현할 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변 사람이나 우리 국민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통일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믿음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있어 연령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일에 대한 인지적 태도로 통일이 가져다 줄 편익에 대한 인식에 연령대별 차이가 있지만 통일이 가져올 혼란 또는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7개 독립변수의 4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탐색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 월소득, 이념은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중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인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일필요성	단일국가 필요성	평화적 분단	바람직한 미래상
성별	0.00***	-0.05***	0.03***	-0.04***
연령	0.14***	0.08***	-0.12***	0.12***
소득	-0.07***	0.01***	-0.03***	-0.01***
이념	-0.04***	-0.01***	0.08***	-0.06***
경제적 편익	0.21***	0.18***	-0.12***	0.14***
민족정체성 강화	0.11***	0.09***	-0.06***	0.05***
전쟁위험해소	-0.04***	-0.04***	0.03***	-0.04***
평화증진	0.06***	0.15***	-0.03***	0.00***
통일정서-부정	-0.06***	-0.06***	0.06***	-0.12***
통일정서-긍정	0.24***	0.21***	-0.11***	0.11***
통일에 대한 규범	0.10***	0.23***	-0.17***	0.04***

\* :  $p < .05$ , \*\* :  $p < .01$ , \*\*\* :  $p < .001$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외한 모든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강하게 느낄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beta = 0.10$ ), 남북이 단일국가를 형성해야 하지만( $\beta = 0.23$ ) 평화적 분단에는 반대( $\beta = -0.17$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일국가 필요성과 평화적 분단에 대해서는 7개 독립변수의 영향력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식의 차이가 통일에 대한 태도와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응답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 국민에게 ‘통일’ 또는 ‘분단’의 이름으로 한반도 문제를 제시할 경우 자기 검열의 기제가 작동하면서 자신의 속내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응답을 하는 반면, ‘한반도의 미래상’의 이름으로 한반도 문제를 제시하면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것이다.

물론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식이 4개 종속변수의 차이를 설명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가 4개 종속변수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4개 종속변수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통일에 대한 인지적 태도의 경우 종속변수별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모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sup>8</sup> 큰 틀에서 통일에 대한 태도가 4개 종속변수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식은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8 통일에 대한 4개 인지적 태도가 4개 종속변수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는 본 연구의 목표와 다소 거리가 있고 분량의 제약으로 인해 생략하였다.

#### IV. 함의

본 연구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일관적 응답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비율이 50%이지만 남북이 통일국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가 통일이라는 가치-적재적 단어가 환기하는 사회적 규범의 영향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통일, 분단을 포함한 질문은 사회적 규범이 강하게 작동하는 반면 남북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질문은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질문에 따라 세대 간 차이가 관찰되거나 되지 않는 결과도 설명가능하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 비해 통일에 대해 사회적 규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규범 인식의 차이가 질문이 환기하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조응하는 경우 세대 간 차이가 관찰되지만 질문이 사회적 규범을 상기하지 않으면 세대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응답이 타인의 시선,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는 응답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통일인식 관련 조사가 사용하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응답자의 솔직한 생각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사회적 규범에 따른 통일이 반드시 잘못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통일이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루어야만 하는 우리 민족의 절대적 과업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이 규범화되는 것의 장단점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설사 통일에 대한 절대적 규범을 인정하더라도 그 규범을 내재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신념과 배치되는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집



단의 모든 구성원이 원하지 않는 결정임에도, 모든 구성원이 다른 사람들은 그 결정에 동의한다고 착각해서, 만장일치로 잘못된 결정한다는 애빌린의 역설<sup>9</sup>이 통일문제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우리 사회의 통일인식에 녹아 있는 사회적 규범의 거품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비율이 50%인 상황에서의 통일담론과 남북이 단일국가로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18%, 현재와 같은 분단도 괜찮다는 국민의 비율이 17%인 상황에서의 통일담론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우리 사회의 통일담론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실제로는 후자의 상황이지만 전자의 상황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

<sup>9</sup> Jerry B. Harvey, "The Abilene paradox: The management of agreement." *Organizational Dynamics*, vol. 17, no. 1 (Summer 1988), pp. 17-43.

## 참고문헌

박주화 외 공저,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20.

박주화 외 공저, 『2022 KINU 통일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22.

Ajzen, Icek.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no. 2 (December 1991), pp. 179–211.

Cialdini, “Social Influence: Compliance and Conform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5 (July 2003), pp. 591–621.

Harvey, Jerry B. “The Abilene paradox: The management of agreement.” *Organizational Dynamics*, vol. 17, no. 1 (Summer 1988), pp. 17–43.

김범수, 「통일에 대한 의식」 『2022 한국인의 통일의식: 기로에 선 평화, 다시 묻는 통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대회 (2022년 9월 27일)

전국지표조사,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75호 (2022), <<http://nbsurvey.kr/archives/4721>>

# 리뷰

---

'고뇌하는' 현실주의자와 '제3의 성찰' · 정병기





---

## ‘고뇌하는’ 현실주의자와 ‘제3의 성찰’

●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서평〉

- 클레이 클레멘스 저, 권영세 역, 『서독 기민/기사당의 동방정책: 고뇌하는 현실주의자』(파주: 나남, 2010)
- 류우익, 『제3의 성찰: 자유와 통일』(서울: 21세기북스, 2022)

한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는 아니다. 사이프러스와 수단, 중국까지 분단국가는 세 나라가 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통일을 열렬히 염원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말이다. 여러 여론조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고 있을 때 그야말로 더 늦기 전에 신속하게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나라가 독일이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수용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10여 년의 간격을 두고 발간되었지만, 독일 통일 정책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두 권의 저서가 있다. 클레이 클레멘스(Clay Clemens)의 『서독 기민/기사당의 동방정책: 고뇌하는 현실주의자』(나남, 2010)와 류우익의 『제3의 성찰: 자유와 통일』(21세기북스, 2022)이다. 클레멘스의 저서는 권영세 현 통일부장관이 번역했고 두 번째 책의 저자인 류우익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기 통일부장관이었던 점이 흥미롭다. 무엇보다 통일 정책의 책임자가 독일 통일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통일 정책의 방향과 전망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마지못한’에서 ‘고뇌하는’으로

『서독 기민/기사당의 동방정책: 고뇌하는 현실주의자』의 원제를 직역하면 ‘마지못한 현실주의자: 기민/기사연과 서독의 동방정책(Reluctant Realists: The CDU/CSU and West German Ostpolitik)’이며, 원서 발간 연도는 1989년이다(정치학계에서는 CDU/CSU를 ‘기민/기사연’으로 부르므로 아래에서는 ‘기민/기사연’으로 통일함). 역서는 ‘마지못한(reluctant)’을 ‘고뇌하는’으로 의역했으며, 주제목과 부제목을 바꾸었다.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과임을 강조하는 원제보다 행위자 요소와 환경 요소의 적절한 고려를 담고 있는 번역 제목이 더 적절해 보인다. 원서 발간 연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주요 대상 기간은 1969년 동방정책이 시작되던 해부터 1982년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의 흑황연정(기민/기사연-자민당, CDU/CSU-FDP)이 들어서기 직전까지의 시기다. 하지만 서론과 결론에서 각각 1969년 이전과 1982년 이후의 상황도 충실히 다루고 있어 통일 이전 구 서독의 통일 정책을 소상히 알 수 있게 한다.

2010년 당시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추천사를 통해 “대동독 정책에 대한 각

정파 간 이분법적 인식의 대결선을 넘어 서로의 생각을 변증법적으로 합치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점을 강조했다. 한편 역자는 이 책의 백미를 “저자가 ‘이중적 적응’(ambivalent adaptation)이라고 부르는, 기민/기사연의 야당 초기 시절 완고한 대결 정책의 전통과 후기의 변화된 국내의 환경을 고려하여 새롭게 추구하기 시작한 입장을 변증법적으로 완전히 합치시키지 못한 [...] 점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 두 표현은 행위자들 간 변증법과 행위자-환경의 변증법이라는 점에서 일견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립하는 두 측면의 변증법적 종합이라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다만 역자가 지적한 부분은 1982년 이후 콜 총리의 통일 정책과 관련되는데, 급속한 통일 국면에서 이 정책 또한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역자의 설명에 따르면, 동방정책(Ostpolitik)은 일반명사로서 서독의 대(對)동독 정책 일반을 말하는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을 지칭하거나 동독을 포함한 동구를 상대하는 정책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고유명사로서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사민당(SPD)에 의해 입안되고 집행된 ‘특정한 대(對)동독·동구 정책을 지칭할 수도 있다. 이 책에서 동방정책은 두 번째 의미인, 서독이 동독을 포함한 동구를 상대하는 정책 일반을 의미하면서, 논의의 핵심은 서독의 통일 정책에 맞추어져 있다. 역자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동방정책을 세 번째 의미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신동방정책’으로 주로 지칭한다. 따라서 책에서는 대개 ‘새로운 동방정책’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이 서평에서는 고유명사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신동방정책(Die Neue Ostpolitik)’으로 부른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책의 논점을 다섯 가지로 잘 정리해서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한다(33~35쪽). 첫째, 신동방정책에 대해 기민/기사연은 새로운 동서 관계가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민족 분단과 정치적

중립주의, 외교적 고립, 사회주의의 승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둘째, 국제적 제약 조건과 국내적 요인들로 인해 기민/기사연은 신동방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셋째, 마찬가지로 이유로 사민당도 신동방정책을 고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민/기사연은 신동방정책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자신들의 의구심을 감내할 수 있었다. 넷째, 1982년 무렵부터 보인 기민/기사연의 행보는 동서 대화를 불신했던 전통적 가정과 목표를 신동방정책 지속 의지와 결합하기는 했지만 완전한 통합에까지 이르지 못한 '이중적 적응'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1982년까지 기민/기사연이 보인 행보는 여러 요소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정책적 선택이 제한적인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이 책의 결론은 기민/기사연의 통일 및 동방정책이 행위자적 의지보다는 내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 아니라, 변증법적 종합의 완성이 아니라 오직 끊임없는 노력 과정의 하나였다는 것이다. 기민/기사연의 “적응은 독일 문제와 동서 관계에 대한 그들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다”(404쪽)라는 대목은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문장이다.

책의 서술은 학술적 분석이 아니라 각종 보도와 기록을 통해 기민/기사연 내의 논쟁과 행태를 상세히 소개하는 방식을 따른다. 특히 1970년대 초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의 핵심 조약들을 둘러싼 의회 비준이 내각 불신임투표로 이어지고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은 긴장감 넘치는 사극을 보는 느낌을 자아낸다. 이것은 저자가 학자라기보다 미국 공공외교정책 전문가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번역도 쉽게 읽히면서도 전문적으로 훌륭하게 이루어졌다. 역자가 독일 연방법무부에 파견되어 독일 통일 과정을 연구한 경험이 녹아들었을 것이다.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총재 한스-게르트 뢰터링(Hans-Gert Pöttering)의 추천사처럼 “미국학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연구를 했다는 것이 이 책을 더 흥



미롭게 만든”다. 미국 학자의 시각에서 기민/기사연을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기민/기사연의 주체적 의지보다 환경적 요인에 의한 수동적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자못 의외다. 독일 통일에 대한 독일 내의 저술이 많이 있지만, 미국의 시각에서 서술된 책은 드물다. 특히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미국의 시각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시각과 판단에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서술의 대부분이 당내 정파 갈등과 정치 지도자의 행위자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독자에게 친절하고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결론은 서술을 거슬러 내용을 배신한다.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슈트라우스(Franz Josef Strauß), 슈미트(Helmut H. W. Schmidt), 콜의 정치 성향과 행위를 상세히 분석하고, 특히 콜의 실용적이고 포용적인 조정자적 리더십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기민/기사연은 장기적 결과에 대한 숙고를 미뤄둔 채 단기적으로 점진적인 관계 진전을 관리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는 판단도 마찬가지다. 숙고를 미뤄두었다는 것은 적어도 당시에는 장기적인 목표가 사실상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장기적 목표는 신념이나 가치에 녹아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 신념과 가치 그리고 그에 기반한 장기적 목표는 협의 민주주의라는 정당 정치 문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대응의 산물이든 환경적 제약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든 미필적 결과라는 판단이 옳다 하더라도 주체적 선택의 여지는 언제나 있으며 실제로도 작용한다. 준비되지 않은 행위자는 환경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해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에서 사민당뿐만 아니라 기민/기사연과 자민당의 적절한 대응은 그들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

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환경 변화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명하게 붙잡아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주체의 준비는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독일 통일 정책은 보수(conservative)가 통조림(conservation)처럼 현상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민감하고 유연해야 한다(flexible)는 사실을 잘 증명하는 사례다. 기민/기사연은 1960년대 말까지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에 얽매인 채 국제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정권을 상실했지만, 1982년 다시 집권한 후에는 변화된 현실을 인정해 사민당의 신동방정책을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1980년대 말 동구 변화를 재빨리 인식해 통일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그러하다. 반면 진보가 더 원칙에 얽매일 수 있다는 것도 증명된다. 사민당이 1960~70년대에는 누구보다 빨리 동서 관계의 변화를 파악하고 브란트의 유연하고 현실적인 신동방정책을 통해 통일의 디딤돌을 놓았지만, 거꾸로 1980년대 통일에 임박해서는 오히려 그 원칙에 얽매어 급변하는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보든 보수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하는 열망은 다르지 않다. 다만 그 미래상과 방법이 다를 뿐이다. 때로는 원칙보다 현실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알게 해준다. 물론 그 방법과 미래상을 자신과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다른 얘기지만 말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러한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옳바르지 않다는 것에도 누구나 동의한다.

환경 요인이라는 외부 요인이 결정적이었다는 판단은 기민/기사연 전체가 아니라 근본주의자에게만 해당하는 듯하다. 왜냐 하면, 헬무트 콜이나 본 바이체커(Richard von Weizsacker) 등 개혁파들은 환경에 대한 재해석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적황연정(사민당-자민당, SPD-FDP)의 신동방정책을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계승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고뇌한' 결과일 것이다.

또 한 가지, 과연 기민/기사연은 동서 교류를 분단 고착화로만 인식했는가? 자유주의 진영이 선호하는 기능주의 국제관계 이론에 따르면, 교류는 통합을 촉진한다. 기민/기사연에는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공존한다. 신동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슈미트 내각 시기에는 오히려 이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려던 정파는 기능주의 시각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독일 통일을 보더라도 신동방정책 이후 지속되어 온 동서독 간 교류가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었고 결국 통일에 대한 열망을 키우게 만들었다. 이러한 한계들은 이 책이 1988년까지만 다룬 것에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이 궁금증은 『제3의 성찰: 자유와 통일』을 통해 일정하게 해소될 수 있다.

### ‘제3의 성찰’: 자결(自決)과 이어달리기

이 책은 독일에서 지리학을 공부한 저자가 2019~20년 로베르트 보슈 재단(Robert Bosch Stiftung)의 폰 바이체커 펠로(Richard von Weizsäcker Fellow)로 초청받아 다시 독일을 방문해 베를린에 머물면서 연구한 결과물이다. 독일에서 동시 출판된 책 『제3의 성찰: 독일 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Die Dritte Reflexion: Die Lehren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für Korea)』의 한국어판이기도 하다. 독일어 제목과 달리 부제를 ‘자유와 통일’로 바꾼 것은 책의 핵심 개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저자는 밝힌다. 특히 ‘제3’이라는 표현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성공 사례, 즉 독일의 통일을 자국의 미래에 비추어보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25쪽)이라고 밝혀 의미를 더한다.

자유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저자의 입장에서 다소 달리 쓰이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이 책에서 자유는 “개념의 정의에 있어 자결(自決)의 의미를 내포

한다면, 통일은 당연히 ‘공동 결정’의 뜻을 포함”한다(150쪽)고 뚜렷이 적혀 있다. 이 책의 목적이 독일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한국에 적용하는 것인 만큼 한국의 대북 및 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지면이 할애된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서술은 정치적 입장이 명확히 드러날 뿐 아니라 교차 서평을 위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서평에서는 독일 통일과 그 시사점에 관련된 설명에 한정한다. 굳이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이 책에서 한국의 통일 정책을 다룬 부분은 교류와 협력이 분단을 고착화한다고 본 기민/기사연 근본주의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62명과 함께한 대답을 통해 통일 정책 수립과 통일 과정 및 통일 후 통합에 대한 입장을 생생하게 기록했다는 점이다. 지리학 교수로서 서울대에 재직하면서 오랜 연구를 수행해 온 학자답게 저자는 대답 인물들의 직업과 연령 등 사회인구학적 성격을 상세히 소개한다. 지리학에 문외한인 평자의 입장에서는 이 저서가 지리학적으로 얼마나 훌륭한지는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통계적 설문조사처럼 인구 비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미리 밝힘으로써 정성적 분석의 오류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확실하다. 예를 들어 노동자와 농민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른 자료로 보충했다고 밝혔다.

통일 당시 대통령 폰 바이체커, 동독의 마지막 통일사회당 총리 모드로(Hans Modrow: 1989.12~1990.03), 통일 당시 서베를린 시장 뎀퍼(Walter Momper)와의 대답은 대단히 소중한 자료들이다. 그중 평자가 감동적으로 읽었고 한때 번역까지 시도했던 『동독의 여자들(Frauen in der DDR)』의 저자이며 ‘통일사회당 독재청산연방재단(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소장을 지낸 카민스키(Anna Kaminsky)는 특히 반가웠다. 한편 통일 정국의 사민당 총리 후보 라퐁텐(Oskar Lafontaine), 동독 통일사회당의 후신인 민사당(PDS)을 이끌었던 기지(Gregor Gysi), 민

주화된 과도기 동독의 유일한 총리였던 드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 1990.03~1990.10), 통일 총리 콜, 외무부 장관으로서 독일 통일의 국제 관계를 조율한 겐셔(Hans-Dietrich Genscher), 동독 출신으로서 독일 최장수 총리가 된 메르켈(Angela Merkel) 등의 대담이 없어서 아쉬웠다. 다행히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등 여러 다른 자료들을 수집해 직접 대담에 버금갈 정도로 기술했다.

마르부르크(Marburg) 대학 강연 후 저자는 한 대학생으로부터 “독일 통일 과정은 정치인들에게는 관대했지만 동독 시민들에게는 가혹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썼다(55쪽). 이 대목을 읽고 평자도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이 책은 독일 통일의 교훈을 12가지로 정리한다. 그중 첫 번째가 “독일 통일은 인민에 의해 시작되었고 인민에 의해 완성되었다”(202쪽)는 것이다. 한 반도에 주는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좀 더 심화하자면, 동독은 먼저 민주화한 이후 서독과 통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된 동독은 국가비밀경찰 슈타지(Stasi)의 인권 침해 등 통일사회당의 독재 정치를 청산해낼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 결국 청산 과정은 통일 독일로 넘어갔고, 신속하면서도 평화적인 통일 교섭과 과정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평화적 교섭과 통일은 통치 집단들 간의 일정한 양보를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일사회당 독재에서 고통받았던 동독 인민들의 불만이 통일 독일에서도 터져 나온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동방정책에 대한 평가다. 이 책에서 동방정책은 신동방정책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된다. 동방정책이 동서독 관계의 평화적 관리에는 기여했지만, 주된 공로자는 아니라는 것이 이 책의 입장이다(204쪽). 『서독 기민/기사당의 동방정책: 고뇌하는 현실주의자』도 동방정책을 ‘주된 공로자’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저술의 목표와 분석

대상 시기가 달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상당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다. 특히 콜 총리에게 이어진 동방정책은 통일에 중요하게 기여했다고 본다. 이러한 차이는 『제3의 성찰: 자유와 통일』이 클레멘스의 저서와 달리 동방정책을 사민당의 신동방정책에 한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자의 입장이 기민/기사연 근본주의에 가깝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통일과 통일 정책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천착을 통해 저자는 한반도 통일에 적용할 세 가지 기본 원칙과 네 가지 실행 원칙을 도출한다(이 책의 제2장은 조사 지역에 대한 지역 지리적 기술을 위해 1970년대 유학 시절 서독에 대한 회고 기술과 2019~20년 통일 독일에서 행한 답사 기록에 할애된다).

세 가지 기본 원칙은 자유 민주 통일, 자주 통일, 평화 통일이다. 이때의 ‘자유’는 앞에서 말한 ‘자결’의 맥락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두 요소 중에서 평등과 길항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자결’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 원칙인 ‘자주 통일’과 중복되기도 한다). 북한은 인민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남한은 자유 민주주의를 내세운다. 북한이 자유의 가치보다 평등의 가치를 우선한다면, 남한은 평등의 가치보다 자유의 가치를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 민주 통일은 적어도 개념상으로는 남한식 민주주의에 따른 통일(‘흡수 통일’이란 말을 저자는 거부한다)이라고 볼 수 있다.

네 가지 실행 원칙은 대동 정신, 실용적 접근, 정책의 일관성, 적극적 통일 준비다. 네 가지 모두 독일 통일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과 성찰을 통해 도출한 합리적 핵심들이다. 클레멘스의 저서에서 저자와 역자가 동시에 강조한 정파간 변증법적 통합도 대동 정신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실용적 접근을 통해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통일 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적극적 행보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통일 정책에서도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할 원칙 들임에 틀림없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통일 정책은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좋은 점을 수용하는 ‘이어달리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통일과 담론』 제2집 1호 원고 모집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연구센터는 연 2회(5월, 11월) 발간 학술지 『통일과 담론』 제2집 1호(상반기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통일과 담론』은 통일, 남북관계 등 관련 주제를 다룬 학술 논문을 엄선하여 실을 예정입니다. 특히, 『통일과 담론』은 이 주제들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상상력, 새로운 이해의 틀, 다양한 성찰들과 담론들을 나누고 융합하는 일종의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과 담론』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념과 생각의 차이를 떠나 서로 관계 맺고 소통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과 담론』에 투고할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합니다. 원고는 「논문투고 및 작성 요령」에 따라 ‘아래아 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해야 하며, 총 분량은 200자 원고지 180매 내외입니다. 원고에는 논문 요약문(국문은 원고지 3매 내외, 영문은 200단어 내외)과 주제어(Keywords)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일과 담론』에는 학술논문과 함께 통일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과 평가, 문화예술 작품(책, 영화, 전시 등)에 대한 ‘리뷰’ 등도 투고할 수 있습니다. ‘이슈’와 ‘리뷰’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입니다.

원고는 이메일 unicenter2022@gmail.com로 투고하고, 투고 마감일은 4월 10일(5월 31일 발간)입니다. 원고는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출판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편집간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간사 연락처	전화) 02-901-7167 팩스) 02-901-7088 이메일) unicenter@unikorea.go.kr
•원고 접수처	unicenter2022@gmail.com
•투고 마감일	2023년 4월 10일(월)
•발간 예정일	2023년 5월 31일(수)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연구센터 『통일과 담론』 편집위원회

# 통일과 담론

2022년 하반기호  
제1집 2호

## 【특집기획】

- 세계질서 전환의 시대와 한국 · 전재성 13
- 대전환의 시대, 남북관계의 회고와 성찰 · 박인휘 37

## 【일반논문】

- 남북 문학사의 소통과 '통일/문학'이란 개념 - 북한『조선문학』  
『문학신문』(1945~67)의 기사 제목 분석을 중심으로 · 김성수 61

## 【글로벌 인사이트】

- 최근 미국 고위급 인사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의  
안보 정세와 양안 평화와 안정의 전망 · 왕신셴(王信賢) 89

## 【이슈】

-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솔직한 마음 · 박주화 109

## 【리뷰】

- '고뇌하는' 현실주의자와 '제3의 성찰' · 정병기 123